

제349회국회  
(임시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2월13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2. 한·아프리카센터법안
3. 재외국민보호법안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
1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 3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2.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상진·심재권·김선동·여상규·이석

현 · 김세연 · 이종배 · 강석호 · 이은재 · 오제세 · 김규환 의원 발의) .....	14
3.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박홍근 · 이용득 · 김종민 · 정춘숙 · 조승래 · 설 훈 · 유은혜 · 안호영 · 소병훈 · 임종성 · 김민기 · 김성수 · 김병기 의원 발의) .....	14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전현희 · 황주홍 · 박재호 · 김경협 · 이원 욱 · 김두관 · 김해영 · 이훈 · 박영선 의원 발의) .....	14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김광림 · 김삼화 · 조훈현 · 노웅래 · 추경 호 · 최도자 · 이진복 · 권성동 · 유재중 의원 발의) .....	14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정태욱 · 김성원 · 김현아 · 이현승 · 유기 준 · 성일중 · 지상욱 · 김정재 · 김명연 의원 발의) .....	14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윤호중 · 이동섭 · 이찬열 · 윤종오 · 권철 승 · 박광온 · 전재수 · 박홍근 · 박용진 의원 발의) .....	14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송기석 · 김관영 · 장병완 · 이상돈 · 김종 대 · 조정식 · 김삼화 · 황주홍 · 남인순 · 정성호 의원 발의) .....	14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노회 찬 · 김성수 · 윤종오 · 김영호 · 강창일 · 김종훈 의원 발의) .....	14
1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명연 · 김성태 · 문진국 · 유기 준 · 신상진 · 홍철호 · 조경태 · 박인숙 · 성일중 의원 발의) .....	14
1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 표발의)(전혜숙 · 안규백 · 황주홍 · 이찬열 · 송옥주 · 조정식 · 변재일 · 박남춘 · 정재호 · 박광온 의 원 발의) .....	14
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문미옥 · 김두관 · 송영길 · 권철승 · 이춘석 · 김정우 · 박영선 · 김태년 의원 발의) .....	14
1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	14
14.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16.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심재권 · 원혜영 · 김민기 · 김병 기 · 문미옥 · 안규백 · 손혜원 · 추미애 · 황희 · 전해철 · 설훈 · 박영선 · 신경민 · 김경수 · 윤후덕 · 진선미 · 권미혁 · 임종성 · 김정우 · 이찬열 · 정춘숙 · 유성엽 · 정동영 · 정세균 · 황주홍 · 이석현 의원 발의) .....	14
1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이원욱 · 김영진 · 황희 · 최명길 · 서영교 · 전재수 · 제윤 경 · 이종걸 · 김병관 · 박정 · 권철승 · 김병욱 · 박남춘 · 박재호 · 안규백 · 설훈 · 권미혁 · 김종민 · 소병훈 · 김영호 · 전혜숙 · 조정식 의원 발의) .....	14

(10시07분 개의)

(직원 인사)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외교부와 산하기관  
에 대한 업무보고가 실시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  
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  
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 4년간의 외교 분야 국정  
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되돌아보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외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  
니다.

전광희 입법조사관.  
유재민 입법조사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브렉시트 본격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우리 외교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필두로 하여 미 행정부와 의 정책 조율 문제, 사드 배치 결정과 이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강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유념 하셔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점인 만큼 정부 측에서도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도전들을 국익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외교부 소관 안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고 질의는 안전 상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대체토론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10시10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장관 인사말씀 듣기 전에 이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

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하고 항소한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7일 사이에 진행된 한일 양국의 국장급 협의 문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문서를 검증할 것을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외통위원님께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검증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몬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금감원·외환은행·시티은행에 대한 문서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한 문서의 검증을 통하여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었는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상 관련 발표한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종식은커녕 오히려 반일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독도 영토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러한 졸속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합의문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모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관련 문서를 검증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하고, 외교부도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없다면 검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문서 검증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전으로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바른정당의 3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권**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설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월 13일 현안보고에서 외교부가 업무보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누락 제출한 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장관, 기억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설훈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감 때 요구했던 국정감사 자료가 4개월이 지나 이번에 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말씀하시는……

○**설훈 위원**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아예 무시하고 그냥 답변 안 하려고 들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설훈 위원**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국회 무시예요, 국민 무시예요. 아시잖아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장차관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차관 체면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감 자료가 4개월 뒤에 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재발 방지할 수 있게끔 외교부가 무슨 장치를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 장치를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권** 우선 지금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출의 건,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되

풀이되지 않도록 외교부장관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국회법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수입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심도 있는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금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자료 검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오늘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너무 늦을까요? 11시까지 일단 각 당 간사들께서 이 문제에 관한 1차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검증 문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의 변화 흐름 속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남 1차관입니다.

안총기 2차관입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입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이정규 차관보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종현 의전장입니다.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김찬우 기후변화대사입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입니다.

신맹호 국제안보대사입니다.

(간부 인사)

시간관계상 국장급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2017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감행하는 등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 측의 반발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통상·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IS 발호 등 테러리즘의 확대, 난민의 증가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보호무역주의 고조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공조 의지 확인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 등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정세하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주요 분야별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쪽,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 온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외교부 명의의 강력한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핫라인을 통한 긴급 유선 협의와 한미·한일 6자 수석대표 간의 유선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참석 차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만찬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

신하였는데 이것은 그간 미 측이 보여 온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현재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급 협의를 갖고 있으며,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오후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의 북핵 외교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의 틀을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외통위 현안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보리 제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3개의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자료 4쪽부터 5쪽 상단에 기술된 북한의 주요 발표 내용과 탈북자 증언 및 제재 효과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외교 공조 강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채널에서 미국과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전략적 소통을 연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이어서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등을 통해서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한미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6쪽에 도표로 정리한 양국 정부 간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초당적이고 강력한 대응 의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개원 후 각각 첫 번째 청문회로 북핵 문제를 단독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미 학계,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의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자료 7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지닌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대북 공조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금년 들어 첫 해외 방문으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 무대를 활용한 북핵 공조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뮌헨에서는 53년 뮌헨안보회의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되며, 제가 선도발언을 할 예정인데 전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독일 방문 계기에 주변 4국과 EU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는 첫 번째 회담을 갖고 금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향후 북핵 해법을 위한 구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누적 규모가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선 만큼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받는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와의 통화에서 확장 억제체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앞으로도 확고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급 및 분야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북한·원자력·경제·

확장 억제 등 분야별 고위급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작년 말 출범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 억제전략협의체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조기에 가동되어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상당한 기여 및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동맹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 의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 등 여러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올 한 해에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사안이 한중 관계의 발전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꾸준히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중국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를 지속·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화 등 분야의 호혜적 협력과 인적 교류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양국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

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도전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극동지역 실질협력 사안들을 본격화해 나가는 한편 외교장관 회담 등 양자 협의 채널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8~20쪽에서 보시듯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우리도 유라시아 구상을 중심으로 역내 핵심 국가들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입니다.

정부는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글로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 간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의장에 이어서 금년에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직을 새로이 수임하게 되어 유엔의 3대 핵심 임무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분야 모두에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테헤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쟁 예방 등에 대한 실질적 기여 확대는 신임 사무총장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이자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으로서 WMD 비확산체제 어젠다 설정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 수입도 추진해 나가는 등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채택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등 우리의 개발 경험에 기초한 개발협력 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불리는 난민 상황을 맞아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인도주의 외교 대표 브랜드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적 공여국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ODA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개발협력 역량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5~26쪽입니다.

정부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도로 설립된 MIKTA는 이번 주 G20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설립 3년 만 만에 벌써 아홉 번째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에는 제3차 국회의장회의를 터키에서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동아시아와 중남미 36개국이 대거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여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프로세스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는 특기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체사항은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지역외교입니다.

준 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EU와는 위기관리 분

야로 협력을 넓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시키겠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3월 초 EU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은 한·EU 간 위기관리 분야 최초 협력 사례로 한·EU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은 3월 네덜란드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등 EU 주요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 구성되는 유럽 신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출범 50주년을 맞는 ASEAN과는 정치안보·경제·사회 문화 협력을 심화하고, 2017년 한·ASEAN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쌍방향 문화 교류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ASEAN 문화원을 금년 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ASEAN 관련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등 소(小)다자 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28쪽 중남미 지역 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이후 감지되는 실용적 정책 강화 기조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외교장관의 최초 쿠바 방문으로 조성된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관련해서는 작년 이란 및 아프리카 3개국 정상 순방과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개최된 장관급 한·아프리카 포럼 등을 계기로 올해에도 아중동 지역과 실질협력 관계가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이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쪽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한편 브렉시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20,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경제 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 성장 증진, 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명된 지역경제협력대사의 활동과 재외공관 기업 지원 활동 등을 통해서 각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후속 이행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해서는 자료 3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러, 지진, 정변 등 글로벌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2200만 명을 넘어선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지 해외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해 사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4시간 사건 사고 모니터링 및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재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2월 1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가 있는 영사실습교육장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현장형 영사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사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0쪽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정된 공공외교법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제1차 공공외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2021년에 걸친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한중 수교 25주년 등을 감안해서 미·중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 자산을 활용한 문화·지식 공공외교와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조직 등 우리나라 공공외교 역량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KOICA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KOICA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 전략기획이사입니다.

최성호 지역사업이사입니다.

정우용 사업개발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KOICA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쪽까지 KOICA의 조직과 예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KOICA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어젠다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정된 제2기 국가협력전략에 의거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수원국의 SDGs 목표달성과 인간개발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DGs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을 KOICA의 5대 브랜드로 프로그램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공약 이행을 위해 아프리카와 쌍방향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사업의 구성 요소와 형태를 다각화하여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복합적 연수 과정을 구성하고, 각국의 특정 개발 과제에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파견 성과를 개선하면서 파견 인력의 안전 관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국·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취약국 지원 중기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적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호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과 9쪽입니다.

셋째, 개발협력 파트너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기술 기반의 우수한 신규 파트너를 공모 등을 통해서 발굴하여 USAID, 게이츠 재단 등 외국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혁신적인 파트너들과의 사업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국내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연대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ODA 인지도와 지지도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개발협력 전문가와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고객만족경영 실현과 기관 역량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 전담 부서를 새롭게 발족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28쪽에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주요 사업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국별 협력 사업은 3355억 규모로 편성되

어 있습니다.

11쪽과 12쪽,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조 사업은 1354억입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와는 경제협력과 상호 교류 확산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 아프리카 지역 원조 사업은 1231억이며 이 지역에 대한 빈곤 퇴치, 물 부족, 기후변화 등 KOICA 5대 중점 사업브랜드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16쪽, 중남미 지역 사업은 380억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지역개발·교통·통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원조 사업은 389억이며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 복구 및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구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21쪽,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입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KOICA 봉사단 2280명을 비롯해서 전체 5760명의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도국의 정책 입안자와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0개 과정에 4434명을 초청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국제기구 등 다자기구를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UNICEF 아동 지원 등 13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19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25쪽, 개발 행동 프로그램은 ODA와 과학기술 접목, ODA와 시장형 비즈니스 접목,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6쪽과 28쪽입니다.

KOICA는 금년부터 출연금 외에 외교부 소관의 보조금 사업과 기금 사업 등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금년도 KOICA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해외 재난 및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8쪽,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은 개도국의 감염병 예방 및 퇴치 등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OICA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윤금진 교류협력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저희 재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수준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한국 이해를 심화하며 우호적인 한국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현한다는 네 가지의 전략적 방향성 아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공외교 분야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은 저희 재단에 특별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재단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 6일자로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이전 준비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의 서귀포 이전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

또한 공공외교법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의 업무 그리고 부산 아세안문화원 운영을 개시하고, 또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업무 등은 21세기형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쌍방향 교류의 새로운 기회를 저희 재단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까지는 저희 재단의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다음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입니다.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은 해외 대학의 한국학 기반을 확대하여 지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은 14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학 진흥 전략을 내실화하고 현지 조사 방식을 체계화하여 해외 한국학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서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 사업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는데 객원교수 파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국학 지원 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14페이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인사 교류 사업 그리고 해외 정책연구 지원 사업, 민간 외교단체 지원 사업, 양자 그리고 다자간의 포럼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약 196억 원입니다.

글로벌 인사 교류 사업은 세계 각국의 고위급 유력 인사와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들을 초청하여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터키 등 우리와의 수교기념국가 인사 초청을 확대 시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력 인사 85개국의 158명을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해외 주요 연구기관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연구기관 지원을 통한 한국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1개국의 27개 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지한파 차세대 정책 전문가들을 발굴·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우수한 민간외교 활동도 지원하여 민간외교를 활성화하고 공공외교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 민간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터는 양자 간 그리고 다자간 포럼입니다.

여러 상대국 그리고 상대 지역들과의 지적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 교류 그리고 미디어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외공관 및 국내외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해외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관련 출판물·영상물이나 도서·시청각 자료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은 110억 원입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글로벌센터는 중구 수하동에 위치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갤러리 공간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는 폭넓은 한국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계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아세안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사업으로서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건축 중이며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자체·아세안 국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 참여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아세안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4페이지에는 말씀드린 저희 재단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저희 재단은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수년 동안 적절한 임차 건물이 없어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의 청사로 입주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 건물 내부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경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소프트 파워·스마트 외교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시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동포재단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족 자산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커지면서 재외동포 정책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준 기획이사입니다.

김영근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정원 61명, 616억 원의 예산으로 동포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전략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가 150년 경과됨에 따라 재외동포의 현지 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 보존과 재외동포의 인적 자산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재단의 2017년도 전략목표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재외동포사회 역량 강화 및 모국과의 교류 협력 증진, 재외동포 차세대의 육성 및 지원, 재외동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동포 사업 수행 체계 구축·발전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교육 사업입니다.

재외동포 대상 한글과 한국의 역사 및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단은 전 세계 1900여 개의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효율화하고 있으며, 한글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중국 지역과 CIS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육기자재 지원과 강사 파견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지역의 한글 보급 강화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전 세계 한인회 등 재외동포 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CIS 지역의 경우 금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장학사업과 효율적인 직업연수 등 동포의 권익 신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은 특별영주권자, 신 정주자, 10만 조선족 사회 등 다양한 동포사회의 구성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차세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사회의 동질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의 내실화 및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재단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한민족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제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요망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입니다.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1000여 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국외 입양인 자녀 등 차세대 대상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들 또 재외동포 기업인들 간의 교류 지원을 위해 우리 재단은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상대회의 더욱 질적인 보강을 통하여 동포기업과 모국 간 공존, 번영 및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시간관계상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재단의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예정대로 제주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재외동포사회는 동포 자녀들의 차세대 민족 정체성 전담 교육 및 동포들의 국내외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센터의 건립을 간곡히 거듭하여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그간 준비해 왔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자 모국 내 활동거점이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주철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 외교부장관, 어저께 긴급 NSC 회의 개최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봤더니 지금 NSC 의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는데 어저께 몇 시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봤더니 지금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돼서 안 나갔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건 제가 우선 구두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창일 위원** 아니, 거기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이따가 자료를 속개할 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건 문제없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 안 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사건에 불참했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사드 문제 이후에 ‘한중 간 안정적 발전 도모’ 이렇게 해 놓고 보고했는데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그다음에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 정부하고 어떤 교섭을,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정적 발전 도모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큰 건들 몇 가지라도.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서귀포로 이전하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예.

○**강창일 위원** 구체적인 일정·내용·규모 이것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예.

○**강창일 위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도 제주도로 옮기지요? 구체적인 일정·규모 이것 해 주세요. 특히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에 안 내려가려고 꿈지락 꿈지락거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일정을 주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예.

○**강창일 위원** 그리고 또 재외동포재단에 국감 때 지적을 했지요, 한상대회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OKTA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 국가 돈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감 때 지적했더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자부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

는 한상대화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OKTA하고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국감 때 지적했지요? 답변했지요, 하겠다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2.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상진·심재권·김선동·여상규·이석현·김세연·이종배·강석호·이은재·오제세·김규환 의원 발의)
3.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박홍근·이용득·김종민·정춘숙·조승래·설훈·유은혜·안호영·소병훈·임종성·김민기·김성수·김병기 의원 발의)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현희·황주홍·박재호·김경협·이원욱·김두관·김해영·이훈·박영선 의원 발의)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광림·김삼화·조훈현·노웅래·추경호·최도자·이진복·권성동·유재중 의원 발의)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욱·김성원·김현아·이현승·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윤종오·권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박용진 의원 발의)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송기석·김관영·장병완·이상돈·김종대·조정식·김삼화·황주홍·남인순·정성호 의원 발의)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노회찬·김성수·윤종오·김영호·강창일·김중훈 의원 발의)
1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명연·김성태·문진국·유기준·신상진·홍철호·조경태·박인숙·성일종 의원 발의)
1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박광온 의원 발의)
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1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심재권·원혜영·김민기·김병기·문미옥·안규백·손혜원·추미애·황희·전해철·설훈·박영선·신경민·김경수·윤후덕·진선미·권미혁·임종성·김정우·이찬열·정춘숙·유성엽·정동영·정세균·황주홍·이석현 의원 발의)
1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이원욱·김영진·황희·최명길·서영교·전재수·제윤경·이종걸·김병관·박정·권칠승·김병욱·박남춘·박재호·안규백·설훈·권미혁·김종민·소병훈·김영호·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윤병세 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동 협약에 의거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대한 국내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10월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96개국에 비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이용되는 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와 이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의정서 미가입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의정서 비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조세정보 교환협정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스타리카 및 모리셔스와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코스타리카 및 모리셔스와 은닉한 자산·소득 적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역외탈세 방지를 통해 세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16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 센터법안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한·아프리카 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양측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미미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센터 설립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함과 아울러 업무의 장기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센터의 공공기관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입니다.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보호의 기본 원칙과 일반 사건 사고 및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사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하여 국외 도피를 방지하거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여권법에서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의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조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여권 발급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를 행한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실 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새 여권 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분실 여권은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국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바 분실 신고 시에 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각한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제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여권 발급 등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바 출국금지 등 타법에서 규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입법목적은 우선적으로 달성한 이후에 여권 발급 등의 제한조치를 보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등록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려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등 CIS 지역의 경우 해당 국가가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과 중심 인사 원칙을 확립·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 개념에 따라 유전자원을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식하고 그 이용을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바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정한 이익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공통된 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 의정서의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 대상국들의 경우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고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해외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조세정보의 교환이 촉진되어 역외탈세 거래 방지 및 세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협정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국제연합에 대하여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하여 관련국과의 국제 공조 등 외교적 노력과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결의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엔 기념일의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 기념일의 상징성 및 공감대, 기념일 지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기념일 지정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경우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재합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원의 ‘양국 협상 과정의 한일 국장급 문서 공개’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합의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을 불이행하는데 따른 외교적인 부담 및 한일 양국 간 신뢰 관계 위축 등 합의 무효 및 재협상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6건의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북한이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금년 초부터 김정은 스스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외무성 대변인 얘기도 또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전후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특히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도발은 그러한 맥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도발에 있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미사일 도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미사일 도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 양국, 한·미·일 3국을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CBM 발사 실험이 아니라 무수단 개

량형 미사일 발사 실험.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ICBM 발사를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발사 준비 단계를 마쳤다고 하는데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을 쫓거든요. 제 판단으로 ICBM 발사 실험 성공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한 것 같다는 입장인데 왜 무수단을 쫓느냐……

저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ICBM이라는 말을 쓰면서 당초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무수단급 개량형, 또 정확한 추가 분석이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발사를 한 것은 일단 이 시점에서, 이 단계에서는 당초 자신들이 약속했던 동일한 ICBM은 아니더라도 도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 주고 또 앞으로라도 필요한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도발을 하겠다는 하나의 신호탄,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미 정부나 의회에서의 북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특히 의회와 연구소 등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단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과거의 비확산 측면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언급들이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준청문회라든가 등등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의 구체화……

**○윤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뭘니까, 선제타격을 할 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동향도 면밀히 주시를 하면서……

**○윤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고위 인사들이 방한하거나 제가 신임 힐러슨 국무장관과 통화 시에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대북 선제타

격론 그 가능성이 지난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과거 보다는 특히 의회·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분석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상현 위원** 예, 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또 이와 반대로 북·미 간에 갑작스런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 타결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졌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장관 이외에는 아직까지 고위 인사들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미 나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 또 힐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장관, 또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또 저희한테 양자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북한 핵 문제와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고……

**○윤상현 위원** 장관님 말씀을 빌려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확고히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 행정부에다가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자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교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행정부가 들어설 때 맨날 북핵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핵 폐기가 아니라,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으로, 협상을 통해서 비확산으로 끝낼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가 달라, 정책을 제시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개성공단 재개를 말씀하시는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작년에 2차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원

을 철저히 봉쇄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이런 새로운 국제사회의 동향 또 안보리 결의와의 관련성……

○**윤상현 위원** 아니 장관님, 대북제재 위반이지요. 맞지요?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작년 3월인가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 보면 개성공단에 가는 모든 물자를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 11월인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21을 보더라도 은행 지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어떻게 개성공단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깐 혼란스러운 대북관이 나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드 배치 완료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양국의 군사 당국 간에 합의한 큰 틀의 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윤상현 위원** 제 입장은 하여튼 금년 내가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급적 조기에……

○**윤상현 위원** 특히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네들 계속 경제 제재 하지 않습니까? 보복 조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응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여러 가지 중국에서 부터 나오고 있는 비공식 규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가능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금년 초에 통상과 관련된 그런 회의에서도……

○**윤상현 위원** 대응 조치에 대해서 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내 주시고요.

우리의 입장은 뭐니까? 어떻게든 소송을 불사하겠다. 아니면 조용한 해결을 하겠다. 어느 입장

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이라고 보기는, 그쪽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특히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보복을 합니다. 지금의 보복 단계는 10단계로 따지면 한 2단계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네들이 하는 경제 보복의 강도가 큰 대기업 말고는 다른 기업을 고사시킬 정도의 경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그 가정하에 움직여야 된다, 저희 정부가.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기재부의 관리가 ‘아,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으니까 경제 보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취약성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 보복 못 할 거다’, ‘아니다’라고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경제 보복 반드시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핵심이익에 반한다, 사드 배치가.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군사 주권 문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줘서 확실한 교훈을 주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나 기재부나 맞서서 절대로 이렇게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자세로 저희가 그동안 얘기해 왔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 나갈 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오늘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10분 만에 다 될 것 같지 않은데, 우선 최순실 외교 인사 개입 국정농단도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일 관계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 소환한 지 한 달이 넘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난 뒤에 그때도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때 며칠 만에 들어온 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십여 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말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설훈 위원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뭘니까? 이 정도 되면 외교부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사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위안부 문제를 놓고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우리가 가해자고 저쪽이 피해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땅땅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이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경까지 빠졌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는 지금……

○설훈 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결론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결과입니다, 결과. 어찌되었든 간에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한 내용이 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면 이건 외교의 참패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우선 따져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그 합의가 장관끼리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설훈 위원 그것 말고 이면 합의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없습니다.

○설훈 위원 정확히 없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설훈 위원 그 정도 되면 이건 중대문서 이상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양국 국민들에게. 법적으로

로는 따져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느낌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받아 보고 ‘이것 참 엄청난 결 했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엉터리예요.

그런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합의된 내용들은 5년 지나면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비공개로 있다가 법원에서 공개하러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뭘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상적으로 5년 있다가 파기한다는 말은 다시 재분류되어서 영구 보존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훈 위원 물론 재분류해서 심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때그때 보고하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문서는 계속 정기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설훈 위원 이걸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구 보존하는 내용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걱정하실……

○설훈 위원 당연히 영구 보존해야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요.

○설훈 위원 아니, 걱정하는 거 아닌 게 아니고 당연히 영구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그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보존할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외교문서는 나중에 외교문서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걸 당연히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구 보존을 안 하고 5년 내에 파기하겠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법에도 맞지 않고.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는 지난 24년 동안에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그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훈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론, 아베가 뭐라 그랬고, 대사가 간 지 한 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지……

○**설훈 위원**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설훈 위원** 좌우간 알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된 것과 그 문제는 일단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설훈 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같은 위안부 문제예요,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부산 문제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에 보다 신뢰를 갖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우리도 대사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 나가면, 대사를 부르지 못한다면, 이렇게 계속, 형태로 따지면 우리가 가해자고 일본이 피해자인 형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국민감정은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는 이게 국민감정이에요. 국민정서예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속수무책이라고 할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훈 위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일본이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거예요. 이거를 국민이 볼 때 얼마나 속 터지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외교부가 어떻게 했느냐?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단순한 구도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전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부산 소녀상 문제를 어

떻게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이런 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설훈 위원** 지혜롭게, 아무리 지혜롭게 하더라도 외교부가 2015년 12월 28일 날 한 합의 그 자체가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왜 부산 소녀상이 나오게 됐고, 왜 이런 지경까지 끌려왔는지? 장관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얼마든지 저희는 시간을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인지를 분명히 길게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시간? 얼마든지 해도 같은 결과예요. 대사 부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최순실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얀마 대사, 베트남 대사, 그리고 KOICA 이사장,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3개가 똑같은 시점에, 뭐 똑같다기보다 좀 다릅니다마는 시간은 비슷한 상황에서 모두 최순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ODA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대사 문제는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최순실이 했다고. 그거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중간발표를 특검에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훈 위원** 베트남 대사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베트남 대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그 문제……

○**설훈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베트남 대사도 역시 최순실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조사가 특검에서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건대 이건 최순실이 관여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김인식 이사장이 와 계시는데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나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훈 위원** 그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최순실을 모릅니다.

○**설훈 위원** 전연 모릅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설훈 위원** 앉으세요.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얀마 대사, 베트남 대사, KOICA 이사장, 모두가 ODA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이 이를 통해 가지고 이익금을 챙기기로 작정하고 덤벼든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베트남 대사는 ODA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설훈 위원** 지금 특검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특검 연장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문제는 장관께서 여기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검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우리 장관께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도 방기한 것 아니냐, 최소한 방기한 것 아니냐, 또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설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검 연장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해요. 물리적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장관은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임공관장 문제는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알고는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최순실처럼 누구 나가라, 누구 나가라 이렇게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방조 내지는 방임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설 위원님, 역사의 기록으로서, 또 이 많은 카메라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외교부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외교부와 저 자신에 대해서……

○**설훈 위원** 그러면 미얀마 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얀마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예 알지도 못하고, 베트남 대사가 나올 때 베트남 공관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내놔요? 하라고 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외교부는 그동안에……

○**설훈 위원** 그렇게 무능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임공관장 제도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외교부 순혈주의를 좀 더 피하고 각계의 유능한 사람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는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고 또 앞으로 무역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당시에 아마 민간 인사로서 여러 사람 추천이 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훈 위원** 베트남 대사, 미얀마 대사, KOICA 이사장, 다 ODA 사업 아니에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베트남 대사는……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그 정도 되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베트남 대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설훈 위원** 잠깐!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되면 이것 뭐 이상하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ODA 사업을 보시게 되면 전대주 대사가 있었던 기간에는, ODA 사업은 전대주 대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실관계를……

○**설훈 위원** 나중에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근거는 다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도 근거가 다 있습니다.

○**설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유재경 대사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임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절차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리고 임용하기 전에 공관장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물론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재경 대사는 공관장 자격심사가 4월 14일에 이루어졌는데 3월 11일, 한 달 전에 외교부가, 장관이 미얀마 정부에 유재경 대사 아그레망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공관장으로서의 적격 여부 따져 보지도 않고 아그레망부터 요청을 했지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장관께서는 당당하게 우리 외교부가 잘못 없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우리 외교행정이 비선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절차조차 무시되고 유린당했는데 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원혜영 위원 그게 오해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특임공관장 제도하고 외교관, 특히 직업외교관 출신의 공관장들과 특임공관장들 간에는 그런……

○원혜영 위원 장관, 최소한 적어도 이 사람 임명하라고 그럴 때, 아그레망 보내라고 그럴 때 외교부장관이 ‘절차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비선실세는 직접 모르셨다니—그 비선실세 지시받아서 하명하는 거기에다가 얘기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비선실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원혜영 위원 글썄요, 그랬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원혜영 위원 어쨌든 자격심사를 받지 않고 아그레망을 보내는 그 터무니없는 지시에 대해서 항변하고 조직으로서의 어떤 정말 책임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외교부의 자존심을 갖고 ‘이건 안 됩니다’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특임공관장 제도를 과거 어느 때보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속에서 이번 유재경 대사 건이……

○원혜영 위원 자격심사 전에 아그레망이 먼저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절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 출신 공관장들에 비해서……

○원혜영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시기가 늦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원혜영 위원 잘못됐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원혜영 위원 예, 됐습니다.

보름 뒤에 삼일절입니다. 특히 올해 맞는 삼일절은 우리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연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지 1년여가 지난 상태에서 그 합의로 인해서 할머니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관,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개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급한 일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다 ‘돈을 쥐라, 그리고 끝내자’ 해 버렸기 때문에 할머니들과 국민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문제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성격의 주장에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원혜영 위원 돈을 달라고 할 때 장관은 우리 정부가 먼저 돈을 달라고 그랬다,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 일본은 왜 그 돈을 주는지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이런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원혜영 위원 지금 장관께서는 이번 합의가 역대 정권 어디도 해결하지 못한 매우 성과 있는 합의라고 누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역사적 진

실을 밝히자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일본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고노 담화가 나왔고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실리게도 됐습니다.

장관께서는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권들이 돈 10억 엔을 받지 못해서 못 했겠습니까? 적당히 해서는 안 될 문제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울인 것이고, 단순히 돈 받고 끝내는 식의 합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억 엔을 받은 것은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국회 앞에서 밝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책임 이행 조치로서 정부 출자 예산을 100% 내서 그러한 재단을 만들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원혜영 위원** 그 의도는 나름대로……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로 보기 때문에……

**○원혜영 위원** 김영삼 대통령은 왜 돈하고 연계되는 것을 끊었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성과를 역대 어느 정부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실은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 안 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만큼 이게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원혜영 위원** 정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또 대외적으로 보기에 ‘돈까지 다 가고 합의가 끝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해·치유재단 먼저 얘기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최근에 피해자 동의 없이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보도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다 보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내부 보고는 안 받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보도 관련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김태현 이사장 등 7, 8명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할머니 병실에 가서 1억 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고 의식까지 잃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태현 이사장을 부르셔서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정확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혜영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수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혜영 위원** 또 친척이 대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할머니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 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일부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재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안부 합의 당시에 생존해 계셨던 46명 중에 4분의 3에 이르는 서른네 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번 12·28 합의를 받아 주시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위원** 장관, 그렇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 말씀 하나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혜영 위원** 그렇게 숫자로 4분의 3이나 받았



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숫자를 강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숫자를 강조 드린 거라기 보다는 이러한 서른네 분 중에는, 그동안 저희가 일부러 이걸 밝히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른네 분 중에는 합의를 반대하는 단체에 소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다섯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정부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재단을 직접 찾아 오셔서 합의를 평가하시고 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어려운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미 서른네 분이 되시고, 만약에 자발적인 의사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단체에 계신 다른 할머니들도 더 많이 참여하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안 됩니다.

○원혜영 위원 글썄, 지금 장관이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할머니들이 동의하는데 몇몇 분이 그런다고 왜 문제 삼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이 위안부 합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할머니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협의한 것이고……

○원혜영 위원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외교부장관 윤병세 합의 이후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할머니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 소통이 이렇게 가서 강요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김태현 이사장한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서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잘못 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원혜영 위원 또 화해·치유재단을 빨리 해산 시키고 우리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역대 가장……

다시 다른 기회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어제인가요,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놀라움을 주고, 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유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쏘았던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성능과, 여러 가지 개선이 된 그런 것을 쏘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유기준 위원 550km 높이로 해서 500km 날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ICBM, 소위 말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까지 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직 ICBM으로 가려면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하여튼 무수단급에서 좀 플러스 되는 수준으로 보면서 지금 정밀한 분석을 한미 정부 당국과 군사 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고체 엔진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지점이 동해의 공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본 열도를 넘어서서 가려면 한 2000km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높이는 높이 가고, 한 500km 날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혹시 동해의 공해상에 떨어졌다면 우리가 그 비행체를 회수해 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할권

이 미치는 지역에 떨어질 경우에는 과거의 관례에 비춰 볼 때……

○유기준 위원 공해는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의 관례에 비춰 볼 때 그런 노력을 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련 당국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들여다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기술에 속한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좀 더 향상을 시켜서 사거리를 좀 길게 하고, 또 대기권에 진입한 이후에 다시 또 공기가 있는 성층권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날아가는 비행체가 타지 않게 하는 그 기술만 개발하면 이 ICBM 기술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면 저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이번에 무수단급 미사일로 발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과거보다, 지난 6월에 성공을 한 후에 두 번째로 또 성공을 한 사례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추가 도발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처럼 하여튼 모든 종류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일부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러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아베 총리와 긴급 기자회견을 밤늦게 가지면서까지 그런 특별한 논평을 낸 것이라고 봅니다.

○유기준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지금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고위 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무역협정 기구에서 탈퇴하겠다, 또 반 이민정책에 맞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미국 법원에서는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미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은 시간만 벌여 가지고 그에 맞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에 맞춰서 미국 국익으로 본다면 어떠한 것을 할지 예상할 수 없는, 심지어는 원점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분명한 공동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 방한 때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저와 Tillerson 신임 국무장관과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제가 내일모레 독일에 가게 되면 Tillerson 국무장관과 이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장관께서는 미국이 우리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런 조치들을 할 거라고 기대반, 희망 반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방향으로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타격을, 원점에 대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말이 좀 들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러한 군사·안보와 관련된, 특히 군사적 억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저희 안보실장한테 얘기한 것처럼 진짜 24시간, 365일 핫라인으로 연계되면서—어제도 전화가 있었습니다마는—모든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할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시간을 끌게 되면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지요, 배치한다는 방

침은?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미 금년 중에, 가급적 조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유기준 위원 이게 지나치게 시간을 끌게 되면서 중국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광객 숫자가 이번 춘절에,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까라는 제주도에 온 중국 관광객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된 소비층이 중국 여성들일 텐데 화장품 소비가 중국에서 되지 않으면서 요즘 화장품 제조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세민항기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없다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실정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항 조치로써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식적인 제지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를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비공식 규제 내지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양한 모든 기회에 이러한 조치에, 그리고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양한 다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비공식 규제는 국제사회의 규약·규범과도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국제 언론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과 특집 기사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유력 언론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중국과의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어, 오히려 중간에 있는 센카쿠 열도의 문제 때문에 중·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복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유형무형……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이 가서 공연하는 것조차 지금 막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이 이런 상태로 있는지 참 의아하다고 말하는 중국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맞아도 우리가 멧집이 많이 풍부한 건지, 아니면 좀 더 때려다오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국내에서 실제 우려가 많으신 것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워낙 저쪽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러한 반발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거시적 지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관광 분야도……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국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완성품도 있지만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그것을 조립해서 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적게 해가면 중국의 수출액도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국에도 썩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해 주는 것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계속 저희가 이 문제는 서로 호혜적으로 풀어 가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외교장관께 묻겠는데요,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석현 위원 NSC 회의에 황교안 대행이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대통령이나, 또 이번과 같은 경우에 권한대행의 참석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모든 사례와 이런 사안의 성격에 비춰 볼 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긴급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건 긴급 상황인데 그때 황교안 대행이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황대행이 안보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석자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리 NSC 멤버는 전원 다 참석을 했구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탄도미사일도 거리라든가 제원에 따라서 다 위협의 정도가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권한대행이든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는……

지금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매일 쏘는 겁니까? 이건 대단히 긴장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 때에 NSC 회의에 참석을 안 한 이유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황 대행?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과거에, 예를 들면 작년에 스물네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참석하신 정도의 아주 위중한 도발은 몇 개입니다. 북한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단위가 낮은 경우에는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장거리 미사일 쏠 때만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는 게 아니면 괜찮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안보라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도 밝혀진 건 뒤늦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NSC 회의가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NSC 회의에 참석을 안고 다른 걸 했다는 건 뭘 했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교부장관 윤병세 권한대행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 시간에 황교안 대행이 뭘 했습니까, NSC 회의 열릴 때?

○외교부장관 윤병세 권한대행께서는 항상 이런 사안에 대해서 권한대행 자격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NSC 결과에 대해서……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뭘 했냐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권한대행실에서……

○이석현 위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권한대행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기로는 AI 관련된 회의도 주재하신 것 알고 있고, 다양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24시간 항상 보고를 받고 있다.

○이석현 위원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대리하는 권한대행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잠잘 수가 있어요? 새벽 이른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때가 4시경이었나요, 발사한 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권한대행이……

○이석현 위원 그러면 거의 아침입니다, 그 뒤에 소집했으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권한대행이 과거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통계가 다 입증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데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 위원들이 아까 미얀마 대사 이야기했는데요. 최순실 비선 세력이 선임한 미얀마 대사를, 비선 세력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하셨는데 아그레망도 받기 전에 부임한 것은 외교부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외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간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일부는 드렸습니다마는 직업 외교관 출신 공관장

들에 대한 자격심사와 특임공관장들에 관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들의 경우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검증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에서……

○**이석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라서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아그레망을 받지도 않고 부임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그레망을 받지도 않고 부임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지만 부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차가 특임공관장의 경우는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단계에서 이게 내려오는 경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특임공관장이나 직업 외교관 출신 공관장보다는 좀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천하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검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현 위원**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왔다 갔는데, 2월 3일에 장관도 만나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석현 위원** 그때 무슨 얘기들을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무래도 이번에 매티스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서울을 최초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석현 위원**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던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의 입장은 연내에 가급적 조기에 사드를 배치한다……

○**이석현 위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얘기 않던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번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전혀 얘기를 안 꺼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석현 위원** 그리고 소녀상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일본에 가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우리한테 매티스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소녀상 문제는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방한 계기에……

○**이석현 위원** 아니, 외교장관 만났을 때 한일 위안부 문제가 첨예한 현안이니까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이전 문제를 꺼내지 않던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체적으로 한미 협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한일 관계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데에서는 서로 인식을 같이했구요.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매티스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어떤 걸 우리에게 원했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워딩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그 양반이 물었고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적인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불어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미·일 관계 개선 또 한미 관계 강화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개선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이라는 건 추상적인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안 꺼낸 건가요, 매티스는? 소녀상이나 위안부?

○**외교부장관 윤병세** 매티스 장관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던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상 문제기 때문에 더더욱 매티스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

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매티스 장관이 국방이니까 지금 미국에서 선제 타격 얘기가 더러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국방부장관과의 논의라든가 저하고의 면담 과정에서 선제 타격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의회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에 들어가서 안 오고 있는 지 한 달 넘었는데요, 그쪽에서 대사가 복귀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차피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난 1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순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도 제 레벨에서 소통할 생각이요, 또 여러 레벨에서 이 문제를 풀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본래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일본이 항의하는 것은 부산 소녀상으로 인해서 외교공관이 위태롭다, 외교공관 보호가 주장이지요, 그쪽 주장이?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작은 소녀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높다란 담장 속에 있는 일본 공관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소녀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늘 집회들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평화집회만 해 왔지 거기에서 무슨 폭력적인 집회를 한 적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난 외통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영사공관을 포함해서 외교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은 국제 예양과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이 일본대사관이냐 영사관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미국이 되든지, 중국이 되든지, 호주가 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공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건 얼마든지 더 열심히 기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다 적절한 장소를 우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되는 시민단체들이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 위원 장관께서 너무 친절하게 길게 답변해 주시는 바람에 물을 말을 다 못 물었는데 하나만 물어보면 강제 연행 부분, 한일 위안부 협상 때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시민단체가 알기 위해서 소송을 내 놓았잖아요. 항소했지 않습니까? 구태여 그런 일을 안 했으면 그냥 공개해 버리는 게 외교부로서도 입장이 편한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무엇을 공개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한일 간에 협상했던 기록을, 이면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기록을 공개하라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이유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된……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누차 말씀한 것 외에 말씀이 뭐냐 하면 일부 그 부분만 공개하라는 건데 그걸 그냥 공개해 버리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미물 이유가 남득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취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하나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고노 담화가 나왔을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잘 밝혀졌

고,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짧게 몇 가지 좀.

얼마 전에 한 언론에 안중범 수석의 업무수첩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장관님, 그 기사 보셨나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LG, 삼성 배터리 중국 방해’ 중간 생략하고, ‘외교 라인 중국 지도부 보복 의지 감지’, ‘중국 기업 압박해서 한국산 사지 마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요즘 안중범 수석의 여러 가지 업무수첩들이 헌법재판소나 특검의 유력한 증거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무렵이, 이 메모가 2016년 10월 8일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가 감지됐다는 것이 수석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전에 장관님께서 9월 26일 날 ‘이것이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좀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 즈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통령도 판단하셨고 황교안 총리, 김장수 대사 다 ‘경제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가장 외교 라인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상반된, 우리 국민들과 청와대 보고가 이렇게 달랐는지?

그리고 뒤늦게야 중국대사를 불러들여서 보복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장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정양석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 기업에 대한, 또 우리 측에 대한 조치들은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

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실지 일어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현지에서, 북경에서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말씀은 알겠고요. 외교부는 보고가 있더라도 너무 선부르게 ‘이게 보복이다’ 언급하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고 피 국내의 우리 내부 논의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상황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사실 우리가 국민 앞에 예상되는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했어야 되는데 사드 문제만큼은 장관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안중범 수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임공관장 관련해서 우선 김인식 이사장님, 아까 최순실 씨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 언론에 16년 5월 달에 최순실, 유재경 이 자리에 김인식 이사장 동석하셨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장님?

○위원장 심재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거기서 그냥……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도 보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보도를 들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안 가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맞아요, 틀려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제가 그 자리에……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저도 말씀 좀 할 수 있게끔 주십시오.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사실 저는 모릅니다, 사실은.

○정양석 위원 그다음에, 가기는 갔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제가 독일에 근무할 때도, 두 차례 근무했었는데 사실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본 적도 없는데……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틀려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 자리에, 유재경 대사 환송회 자리에, 후배들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저는 앉았습니다.

○**정양석 위원** 아, 유재경 대사하고는 자리에 있는었는데 최순실 씨랑은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 말씀인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러니까 저녁 식사 거의 끝날 무렵에요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요.

○**정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런데 말씀을 좀……

○**정양석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것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러면 한 10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실 필요 없다. 모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안 두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일을 하면서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특임공관장 제도는 정말 도입한 취지 그대로 외교부 순혈주의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외교를 하는 제도인데 이번 이런 건이 터졌어요. 장관께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게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체크, 재발 방지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대사 한 분에 대해서 국회가 다 검증하자고 달려드는 것도 또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장관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생각이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양석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의 자질이 중요하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다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말 공공 서비스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익을 추구했던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채널이 좀 있나요, 그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사전 단계든, 아니면 진행되는 단계든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의견은 항상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책임자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것은 다 탈락을 시킨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정양석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모르셨네? 그냥 넘어간 거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의 그 해당되는 민간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커리어가 구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정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여튼 좀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저희들도 법률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 차원에서는 이 특임공관장 제도가 아무리 민간이나 비 외교관 출신에서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교관 출신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또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본대사, 지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안건을 남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이 결자해지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본대사 귀환이 늦어지면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그래도 장관님 재임 기간에 시작된 일이고,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하셔야.

그 협약이 정말 잘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본 게 없다 이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잘된 협약이면 뭐합니까, 대사가 이렇게 안 오고 그 조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 일본대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임기 내에 정말 결자해지할 각오를 해라. 이것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정말 장관님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본 수상이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골프 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사실상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 흔적이 있지만, 또 그것은 안보 체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센카쿠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나는 일본이 더 강경해지고 우리 한일 문제에 관해서 좀처럼 우리가 지금 침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장관님, 어떤 생각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아무래도…… 부산 소녀상 문제는 12·28 합의와는 어느 정도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까마는 이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지금 각계가 지혜를 모으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이구요.

○정양석 위원 하여튼 처리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도 노력할 생각이구요.

또 하나, 지금 한·미·일 관계 차원에서 미국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방한했다는 것, 또 플린 보좌관이 여러 번, 벌써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실장한테 전화했다는 것 자체는 한미 관계, 특히 한·미·일 관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실행정부의 인식이 잘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방위비 문제, 일본이 그렇게 가서 미국의 환대를 받은 것도 방위비야. 방위비 증액과 결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일본하고 안 맞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지 이전 비용이라든가 카투사 지원 비용이라든가 탄약 저장 관리비라든가 이것, 나는 미국이 이런 문제 제기해 오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왜 우리하고 일본하고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9000억 되는데 1조 다 쥐 버리고, 100% 쥐 버리자.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위비에 관해서 국민들 앞에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돈 줄 것 다 주고, 그러면 작전권은 당신들이 작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작권 문제는 별도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나올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기회에, 얼마나 우리 한국 정부가 방위비에 대해서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방위비 차원을 넘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안보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미 준비를 했고, 이미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일본은 75, 한국은 50%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확실히 고치시고.

그다음에 좀 말하기 힘드시겠지만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왜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분담하느냐는 말씀도 한번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원래 공개 발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털러슨 국무장관의 비공개 청문회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발언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니 장관님, 자꾸 속기록 의식해서 그렇게 답변을 시간 끌지 마시고.

아니, 그런 것 있잖아요? 미국과 우리 외교장관들도 협약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려지면 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겠지만 방위비 분담에 왜 우리가 그런 손해까지 봐야 됩니까? 저는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미국 측에 명쾌하게 한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측에서 상임전국위원회가 2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오후 회의를 3시에 개의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찬 후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외교부 내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흔적이 있고 이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일종의 적폐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서 연설문

유출이 있고 또 인수위 보고 내용 또 아베 총리 특사단 접견 자료 파일, 호주 총리 통화 참고 파일 이런 고위급 회담의 내용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멕시코·서유럽·중동·미국·캐나다 이런 등등의 해외 순방 계획과 관련한 계획 유출들, 일정표 유출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K스포츠 등등과 관련해서 순방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대사 그다음에 호치민 영사, 미얀마 대사, 이탈리아 대사는 불발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사 농단과 관련한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최순실의 유럽·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런 거점과 관련했다는, 이것은 아주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까마는 의혹이 퍼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르재단·K-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듯이 원조 사업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관은 계속 외교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르는 것 자체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정황과 흔적들이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금까지는 자체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단호한 청산 과정들, 혹은 치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입장은 뭘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다만 현재 특검이,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최근에 외교부가 칠레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게 발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대 비위 사건을 감찰할, 전담하는 특별감찰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감사 인력 이런 것들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비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측면이라든가 또 조직의 청렴한 문화 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대책 중의 하나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내부 검토만 한 겁니까? 특별감찰팀을 신설하고 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

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러면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게 발표되어 나온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로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단계에 있고 몇 가지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더……

○이인영 위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차원에서의 비리를 넘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특별감찰팀이 외교부 내에 드리워진 최순실의 그림자, 흔적, 국정농단의 아픈 과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치유해 내는 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김영재병원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일종의 인사 보복적 의혹이 짙었던 카자흐스탄의 문화원장 인사 압력 이런 등등의 문제들도 이런 과정에서 다 걸러져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OICA 이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냥 간단……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함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KOICA 이사장 김인식입니다.

○이인영 위원 김인식 이사장님께서 그냥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서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후배입니다.

○이인영 위원 예?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한독경제인회의 후배입니다.

○이인영 위원 양해경 한독경제인회 회장은 당연히 아시겠지요, 그러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독일에서 같이……

○이인영 위원 김인식 이사장님께서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알고 계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쪽의 후배들입니다.

○이인영 위원 다 한독경제인회에 소속되어서 활동들을 같이 하셨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미얀마 컨벤션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 같이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7월 달에 그쪽의 상공부장관이 오셨을 때 같이 면담을 했고요, 7월 중순에 제가 또 미얀마 출장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때 유재경 대사는 K-타운 미얀마 컨벤션센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을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 당시만 해도 유재경 대사는 컨벤션 후보지를 가 보지를 않았 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갔다 와 가지고 유재경 대사한테 제 소견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인영 위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저는 부적격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인영 위원 그때 유재경 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유재경 대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어볼게요.

최순실 씨는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모릅니다.

○이인영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모릅니다.

○이인영 위원 만난 적도 없으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제가 아까 오전에도 정양석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독일에 두 차례 근무했지만 정말 그때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만나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재경 대사, 제가 취임하고 한 사나흘 지나서입니다. 유재경 대사 환송 저녁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날 무렵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 여인이, 안경 낀 여인이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알 필요 없다. 모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하고는 연락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7월 달에 이사장님도 그렇고 유재경 대사도 그

렇고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이사장으로 동남아시아 현장 방문 차 갔었습니다. 현장 방문 차 여러 가지 사업 현장을 보고요, 그중 한 군데 그쪽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거고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갔던 데 말고 다른 데를 다시 조사하러 갔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2차하고 3차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정부 합동반이 갔고요, 3차는 이용수 국장님을 대표로 해가지고 민관 합동반이 가 가지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사실은 제가 1차 조사 보고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이인영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안중범 수석이 정만기 산업자원 관련한 비서관을 통해서 7월 달에 내렸던 그 결론을 재검토해라 이런 일종의 압력이 작용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조사했던 것은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이인영 위원** 압력은 작용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KOICA에서 이사장님 판단하셨던 대로 타당성 없다 이런 쪽으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힘이 빠지면서요, 말하자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최 씨가 힘을 잃고 미얀마의 K타운 내지는 컨벤션센터 사업 추진이 힘을 잃으면서 사업을 중단시켰던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7월, 8월 그 당시는 최순실 씨가 언론에 회자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인영 위원** 이미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아닐 겁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그것 입증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때는 어쨌든 저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이인영 위원** 원칙과 소신으로 하신 것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순실의 힘이 빠지고 국정농단 사태가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 추진의 힘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런데 최초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인영 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 점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감찰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특별감찰팀 활동 과정에서 명확하게 같이 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짧은 시간,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장관, 지난번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해서 한일 간에 합의할 때 ‘소녀상’으로 했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안부상’으로 하려는 일본 측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무슨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일 간에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저희로서는 계속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인영 위원**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 그냥 소녀상이 아니라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소녀상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소녀상으로 된 것도 지적을 했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는 소녀상이 아니라 위안부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정신의 위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용어 문제는 그동안에 다양하게 써 왔습니다마는 양측 간에 합의된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 한 합의된 표현을 쓰는 것이 좋고, 특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 표

현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에 또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그러면 정부는 일본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입장을 전달해 오고 또 앞으로도……

○이인영 위원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하여튼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도 밝혔고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소녀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 일본이 위안부상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저희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는 것이지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것은 합의 정신의 위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합의 정신과 취지 살리라는 얘기는 수차 저희가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잠깐. 제가 말꼬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단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단어 정도가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지금……

○이인영 위원 합의 정신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뭐니까? 우리 역사의 자존심은 뭐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 그동안에 지난 한 달 가까이 수없이 많은 계기에 합의 정신과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권한 대행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대변인도 얘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 데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포괄적인 대답하시면 작년에 한 대답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하

러 그렇게 대답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이인영 위원 이것이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질의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심재권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간 보충질의로 넘어갈 텐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가……

○위원장 심재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장관 답변하시는 것 들을 때 듣는 사람 모두가 함께 부끄럽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는지 잘 아실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새) 위원 우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하 외교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외교 국내외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안보리가 열린다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날 오후에 열리게 되면 저희 시간으로 아침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과거에는 안보리가 열리면 좀 긴장하는 바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보리 열려도 결정하는 것이 없으니까 ‘또 한 번 회의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데 이번에는 좀 진전된 안이 나올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매번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안보리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회의 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안보리는 그 어떤 협의체보다도 아주 적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했고, 그러한 토대하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있을 그런 회의도 일단 일차적으로 안보리 언론성명 같은 것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 그것이 무슨 북극성이니 노동이니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지금 실제로는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군사·정보 당국에서 계속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 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한미 공조하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쩍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은 정확히 선제타격론 쪽에 가깝습니까, 추가적인 제재 쪽에 가깝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한미 간에 또 우리 우방국들 간에 여러 가지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교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억제를 동시에 병행해서 강화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군사적인 억제 이런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고 있고 또 행정부 내 일각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금 유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 부분은 또 우리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협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철저한 한미 간의 협의와 공조가 진행될 것입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그런 채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쪽 논의되어 왔던 것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이다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 얘기하면 그것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솔직하게 냉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물론 나름 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금 운반 수단까지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제재가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란 제재나…… 우리나라도 그 세컨더리 제재 때문에 조 단위의 돈을 물어 줘야 될 그런 금융기관도 있을 정도로 그게 위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홍상그룹인가 그것 한번 하니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보리 결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트럼프 정부하고……

이미 법은 통과되었지요, 세컨더리 보이콧 할 수 있는 것?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토대는 대개 마련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상그룹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냈고, 또 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미국·일본·한국의 이런 독자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도 있는 논의들이,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것 하려면 세컨더리 보이콧 말고는…… 그렇게 하고 중국이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 송유관 그 부분을 손을 대지 않고는 결국은 북한 핵 억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거의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한 사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진전된 핵 보유, 수단을 계속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계속 제재하고 뭐 하면 된다고 계속 해 본들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좀 냉정한 현실 인식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를 아주 튼튼하게 해서, 중국의 협조도 얻고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중국의 원유 그 부분을 손에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장관님, 비슷하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지금 현재 이런 도발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이미 작년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엄중한 그런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마는,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또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미 통상관계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방위비 분담 증액 요청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도 방한했고, 또 힐러슨 국무장관하고도 제가 통화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 측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실제 과거 전례를 보게 되면 대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마지막 해 초기에—저희로서는 2018년 초가 되겠습니다마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이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지금 구체적인 제의라든가 논의는 없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이 빠르면 금년 말, 보통 관례대로 한다면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일본이 제일 많은 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 수준이고—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비교해 보면—그다음에 독일이 제일 낮은, 우리가 평균 중간

수준 이상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힐러슨 국무장관의 의회 비공개 청문회 발언이 언론에 알려졌지만 힐러슨 국무장관 스스로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저희가 그동안에 알려 줬던 저희의 방위비 분담의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라든가 또 GDP 대비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특별한 기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충분한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역량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구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최경환(새)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또 일본의 아베 정부 이후에도 보면 공공외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옛날에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의원이나 지도층이 지한파로 한국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들고 하니까 점점 영향력이 쇠퇴하게 되고, 또 일본만 해도 일본어 세대가 사라지니까 일본 젊은 사람이나,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일본어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그런 것들을 메워 줄 수 있는 부분이 공공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도 만들고 예산 투입도 늘리고 있지만 지금 방향성을 그런 고위급들의 교류나 또 한국에 대한 이해 이런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를……

**○위원장 심재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렇게 방향성을 조금 바꿔

야 될 것 같아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공공외교 시작해서 조금 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충을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전직 외교관 출신들 활용을 하시고—놀리지 마시고—이렇게 해서 그런 공백을, 이번 트럼프 출범하고 나니까 항간에는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야, 정권을 떠나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고위 레벨에서의 회담 또 전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정부 이외의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충분히 준비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서 그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부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요 인사들이 같이 트랙2나 트랙1.5 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공공외교를 지금 워싱턴에서 하고 있고 또 2월 중, 3월 중에도 그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북한이 어제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 그 기동성과 추진력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대륙간탄도로켓의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추미애 위원** 그 일주일 뒤에 외무성 대변인,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대로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입니다. 1월 24일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누가 시비한다고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그만

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발사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얘기한 애니타임(any time), 애니 웨어(any where),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미 당국이 이러한 북한의 사전 시사 또 움직임 등을 대개 쪽 모니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아침 일찍 신속하게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NSC 회의를 소집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협의를 갖고 저희와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서로 안보보좌관 간에, 안보실장 간에 그런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날 오후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고 문건을 또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미 양국 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미 합의한 대로 이러한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런 외교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억제 측면에서 병행시키는 강도 높은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위원** 외교적인 압박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리라 보고요.

군사적인 압박은 지난번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과 우리나라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연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드라는 것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마감단계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ICBM이 완성되고 난 뒤에나 쓸모 있는 것 아닙니까, 설사 그것이 유효한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방어무기체계로서 과연 사드의 파인더가 제대로 식별을 해낼 수 있는지, ‘현재 수준으로는 기만탄과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용하다’ 하는 얘기도, 기술적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 ICBM이 완성되어야지만 그때 가서, 이 사드도 먼저 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ICBM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모순이 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다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엇으로 막아야 될 것이 있고, 사드로 막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SM-3라든가 또 GBI라 그래 가지고 지상발사 인터셉터(interceptor)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중층적인 방어망을 형성한다는 것이 우리 안보 당국의 전략입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핵과 미사일을 도대체 외교적으로 막아 내지 않고 실제 대응하는 군사 무기로 막아…… 핵은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 비대칭 전략을 대칭적 전략으로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군사전략사에서 어느 나라도 입증한 바가 없고 입증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만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순된다 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가 핵개발 하는 것을 NPT 체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드로 막아 낼 수 있으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협조를 받아서 사드 운용을 하면 다 막아 낼 수 있는데 뭐 하러 NPT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핵을 무기로 막아 낸 사례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막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공조를 복원해야 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중국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굳이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국제 공조만 날아가 버려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외교적 압박으로,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응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것이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1월 말에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역사상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보듯이 비록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일과 중국·러시아가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다, 또 공

개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상대가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고, 아직도 ICBM 완성에 있어서 얼마나 근접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그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제 공조를 복원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모순이 되게 안보리 결의…… 안보리 결의를 몇 번 한들, 백번을 더 한들 북한이 말을 들겠습니까? 오히려 국제 공조만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과의 공조를 복원해서 북핵을 6자 간 갈등이 아닌 협력 차원에서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안보리……

○**추미애 위원** 미국의 새 정부도 다행히 이것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또 이미넨트(imminent), 급박한 위협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정책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priority),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그래서 일단 정책의 기초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들 만큼, 그것은 군사 수단도 있을 수 있고 대화 수단도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온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적극적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 차제에 어리석게도 북한이 이런 발사를 했던 말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국제 공조를 모색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부도 우리 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국제 공조를 지금 아주 최대한도로 강화하고 있고, 아마 역사상 이렇게 이번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를 금년 들어서 또 새로운 도발에 맞서 가지고 더 강화시키고, 제가 곧 독일에 가서 G20 외교장관 회의와 뮌헨 안보장관 회의에 가서 선도발언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국제 공조를 더욱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 국제 공조를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대한다거나 또 단순히 우리가 그

냥 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국내 정치용이예요.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사드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지막 남은, 마지막 단계의 이 시간마저도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내에 사드 배치하겠다는, 그런 대응 수단이 안 되는 하위 수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그것을 차기 정부에 넘기시고,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기시고 이 핵 문제만큼은 국제 공조를 어떻게 복원을 해서 대화 수단으로 길을 찾을 것인지, 마침 이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도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주도적인 노력을 할 기회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은 앵무새처럼 동어반복이고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 않습니다.

추 위원님,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까마는 이게 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시간도 점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확실하게 억지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선택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조 체제를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미애 위원 장관님의 같은……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의 같은 동어반복을, 발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는데 한국 정부도 어떻게 하면 실효적인 대화를 할 방법이 있겠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아직 ICBM에 대해서 증명된 것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근접했는지. 북한의 큰소리는 있는 것인데. 그리고 본격적인 실험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마지막 남은 기회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지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무슨 국제 공조의, 앵무새처럼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대응 수단이 못 되는데 사드에 매몰되어 계시

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드는 그냥 눈가림용이예요. 심리적 위안은 될지언정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기제라는 말이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우리 국방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이런 대북정책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습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측면이든 외교적인 측면이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공조가 아마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부 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는 연결고리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트럼프하고는 별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는 오바마 행정부는 워낙 친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횡수상으로는 대선 때까지 트럼프 쪽에 더 많이 접촉했다. 106회 접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상대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콘택트 포인트가 적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일본 관계나 미국 관계나 우리가 지금 외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대사도 간 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지 않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대화 채널 이외에 사실은 물밑에서 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채널을 항상 상시 가동해서 걸로 잘 안 되는 일들을 속으로 어떻게, 그야말로 물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

한 채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활발한 그런 물밑 대화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 장관님이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물밑 대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얘기들을 그리고 속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홍문종 위원 일본과 소녀상 문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하교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전혀, 공식적인 대화라는 것이야 제가 보기에 항상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답답하고 국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그렇게 진전된 입장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의 매티스가 올 게 아니라 국무장관이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일련의……

○홍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뜻을 아시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물론입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60개쯤 곧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뭐……

○홍문종 위원 미국 정보 당국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정부에서 분석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교부장관이시니까 우리 추미애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교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

결해라 그러는데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적인 압박에 추가해서 군사적인 역지가 같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거 사례도 우리가……

○홍문종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압박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북한 편들지 우리 편 안 들잖아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물론 사이가 뜨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요. 안보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장관님이시니까, 장관님도 높은 장관님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이면 서열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교 문제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장관님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외교적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과거에 써 보지 않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엄청난 대북 압박 외교 측면에서 성과를 이룬 것이고요. 또 이행이 상당히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문종 위원 엄청난 성과를 뭘 거뒀어요, 얼마 전에 또 썼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리의 그런 위치에서 사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두 가지가, 2270과 2321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택이 되었는지 아시게 되면, 하나의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총칼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홍문종 위원 아니, 그래서 장관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홍문종 위원**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이것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자멸하는 길이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느냐고요. 어저께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요. 우리만 합니까? 북한도 하는데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종합적인 것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가 공개적으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취하고 있는 조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도 북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마치 레닌그라드를 봉쇄한 것 같다. 쿠바 봉쇄한 것 같다. 굉장히 전대미문의 후안무치한 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러시아도 다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홍문종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외교부에서 하는 대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외교적인 압박이 계속 진행되고 군사적인 역지가 계속 동원되고 국제사회가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되면……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의 속내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외교부가 당하고 있는, 우리 국가가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고,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 제가 기록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랬고 작년에 북핵 도발이, 핵실험이 두 번이나 거쳐 갔을 때도 그랬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외교사상 가장 높은, 가장 빈번한 외교장관 접촉을 했고, 6자 수석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주에 또

독일과 뮌헨에 가서도 주변 4국 외교부장관과, 하여튼 전 세계에서 북핵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다 만납니다. 그렇게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홍문종 위원** 알겠어요.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장관님이 잘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론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제타격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홍문종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대요? 미국하고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몰라도 되는 것이 사실은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진짜 상의한 적이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이 아플 수 있는 외교적인 수단과 군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 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세밀하고 아주 폭넓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화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장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국민들이 안보……

○**홍문종 위원** 저희는 몰라도 되니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군 당국에서, 우리 국방 당국에서 하여튼 24시간 365일 우리 한미 공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홍문종 위원** 우리 국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뭐예요? 옛날에 클린턴 정부가 선제타격론을 주장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것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장관 누구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틸러슨 국무장관.

○**홍문종 위원** 틸러슨도 아주 상시적인 압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중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우리 군 당국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한미 당국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제가 군 당국에서 할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세밀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북한이 선택을 바꿀 때까지 그러한 공조 체제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escalate)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분위기가 점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점점점점 마치 뭐가 더 가까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점점점점 분위기가 더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고,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외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뭔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전략이 올바를 때, 목표가 올바를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되게 나가야 됩니다. 한미 간에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문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옛날에 6·25 때 애치슨 라인이라고 있었잖아요. 신 애치슨 라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십시오.

○홍문종 위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중국이 북한과 남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북한을 선택할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

문에 반드시 냉전시대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문종 위원 저희하고 같이 중국이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측면보다는 북한이 도발 행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북한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는 시각 못지않게 부채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미국이 일본과 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왔을 때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문종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미·일 간에 양자 협력과 3자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홍문종 위원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부하고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어찌고저찌고하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지어는 조공외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을 선택하고 미국은 일본을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미동맹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역대 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못지않은, 그보다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세 장관님과 외교부 및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국제관계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안보에 있어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핵도 지금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또한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론분열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자주국방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국방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안보 보장 장치를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활용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안보적 가치만 지닌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해 대미 수출액이 700억 달러에 이르고 전체 수출액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한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적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 외교정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지난번 30일 날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한미 양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시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상

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사실상 그 당시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1월 말에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의 가장 큰 의미는 현재 우리 한미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처해 있는 이러한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위협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구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100% 한국 정부와 같이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 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또 본인의 대리인인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에 보내서 그걸 전달하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이걸 재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매티스 국방장관이 먼저 방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어제 도발에 대해서도 풀린 국가안보보좌관 자신이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저희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대한 방위공약과 또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야까지 저희가 고위 레벨에서 직접 통화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장관님께서도 지난 7일 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화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와 연관 지어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권한대행 간에 아주 좋은 통화의 토대가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 협의라는 차원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저와의 통화에서도 앞으로 한미동맹 또 북핵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곧 만나서 짜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바로 며칠 후면 제가 독일에서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을 만나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윤영석 위원 미국은 지금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강력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일본·중국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NATO나 기타 동맹들과의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상당히 다른, 증액 인상을 요청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각국과의 FTA도 재협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 사실상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해야 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늘 모두보고에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하여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런 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미 통상 관계 또 경제 관계가 보다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경협 또 통상·투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앞으로 고위 레벨에서의 협의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존의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할 생각입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국제정세 또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간의 외교·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대사가 일본으로 귀국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경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12월 28일 위안부 관련 합의 사항에 어떤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면합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이 국제사회 앞에서 밝힌 그 내용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일본이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지?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귀국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 귀국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걸 정말 외교 관계를 아주 파행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그것은 잘된 합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부산 소녀상,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일본 측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과도한 반응이라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이런 것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차원에서도 고위 레벨 협의를 가질 생각이요 또 다양한 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이 원만하게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신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또한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다른 어떤 후속 조치보다도 화해·치유재단의 사업은 아주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당시에 생존 피해자가 마흔여섯 분 계셨는데 그중 4분의 3에 이르는 서른네 분의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 합의를 받아들여 주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서른네 분 중에는 합의를 반대하고 있는 단체 소속으로 있는 할머니도 다섯 분이 계시고, 또 할머니들 스스로 또는 이분 가족들이 직접 재단으로 찾아오셔서 합의를 평가하시고 재단 사업에 참여하시는 이런 어려운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계속해서 더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이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써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정부 자금을 100% 출연을 받아서 할머니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은 제가 이미 과거에 썼던 겁니다마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우리 24년 동안의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과거 정부들이 하고 싶어도 받아 내지 못했던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하고, 또 이것을 책임 이행 조치로써 순수한 정부 자금을 출연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아베 총리가 공식적인 사죄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베 총리의 공개적인 사죄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시절에 개인적인 명의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머니들한테 편지를 쓴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된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과거 가장 친한적이었던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런 것을 얻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사람들도 이번의 아베 12·28 합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고노 전 관방 장관이라든가 아사히신문의 주필이었던 와카미야 주필이라든가 동경대학 명예교수인 그 교수분도 평가를 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것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화해·치유재단의 이행 과정에서도 절대로 화해·치유재단이 강제적으로 이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해서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것을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확고한 원칙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어저께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강창일 위원** 가벼운 도발 행위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엄중한 도발 행위이고요.

○**강창일 위원** 엄중한 도발 행위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쏠 때마다 점점 기술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엄중한 도발 행위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강창일 위원** 그런데 NSC 의장이 직접 소집해서 NSC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안보실장 주제로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끝내 버렸어요?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트럼프는 밤 10시 35분에 긴급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김관진 실장 주제로 대통령권한대행은 나타나지도 않고,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북한의 도발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시는……

○**강창일 위원** 에이, 자꾸…… 우리가 장관 얘기 들으면 막 짜증나서 그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가안보회의가 있고요.

○**강창일 위원** 됐어요, 됐어.

매뉴얼에 전략적 도발 아니면 상임위원회 소집으로 끝난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도발의 위험과 종류를 면밀히 분석해서……

○**강창일 위원** 그러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가벼운 미사일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24발의……

○**강창일 위원** 전략적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작년의 경우 24발의……

○**강창일 위원** 아니, 전략적 도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보통 저희가 전략적 도발이라고 할 때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이



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것에 미치지 못……

○**강창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왜 그래요? 장관 얘기 들으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전략적 도발이나, 아니냐의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은 전략적 도발이기 때문에 NSC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집으로 끝났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쭙어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떤 도발도 가볍다고 얘기하는, 안보 당국자 입장에서는 가볍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보듯이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스물네 번이 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참석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 스물네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이라도 중대한 도발을 했으면 NSC 소집해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께서……

○**강창일 위원** 아니, 미국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긴급성명을 발표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 대한민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외국에서 어찌 보겠어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아주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권한대행께서는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으시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있고……

○**강창일 위원**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밤늦게 나타나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인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 이거예요. 보고만 받아서 뭐해요, 보고만 받아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아베 총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계기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참말로 또 지금 말씀을…… 아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나타나서 긴급성명 발표했다? 그렇게 실례되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미국 대통령께? 외교부장관답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이! 아, 생각해 보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베 수상이 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창일 위원** 금방 그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플로리다에서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 직후에 이런 도발이 있으니까 또 마침 아베 총리도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는 겁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이…… 좀 보세요. 아베 눈치 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설훈 위원** 장관이 실언했어요.

○**강창일 위원** 제가 지금 정정해 주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님. 조심해서 말씀해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능한 모든 계기를 활용해서 미·일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강창일 위원** 예, 그렇게 조심해서 말씀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단에서 오공태 단장 엄청난 발언 실수를 했어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본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용이에요. 여기에 민단이 나서 어찌고저찌고, 제일동포 피해 입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제일동포들이 제일 어렵게 해 왔어요, 양국 관계 끊기는 바람에. 그때도 발언하지 않았던 민단에서 이번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운운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작업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게 뭐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오공태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또 저희 출입기자들한테도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오공태 단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민단 간부들끼리 회의해서 합의해서 그것을 특파원들한

태도 얘기하고 한국에 와서도 한 얘기고, 자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창일 위원 아이, 참! 장관은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분 중 하나가……

○강창일 위원 저도 지금 다 정보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단장께서 스스로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렇게 말 표현을 해야지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립서비스로 얘기해 준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출입기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어디 딴 나라에서 왔어요? 언론 안 보세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무슨 얘기에요? 주일대사관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했다고. 왜 자꾸 틀린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일본 갑니다. 그분들 만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강창일 위원 이미 확인된 사안이에요. 오공태 단장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민단 간부들은 대사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민단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사안이에요. 오공태 단장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 단장이 과거에도 저한테 서울에 와서 만나게 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관님,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동포들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오공태 단장 이하 간부들이 저한테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강창일 위원 저는요 그분하고 삼십년 지우입니다. 지기입니다. 3년 전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제발 한일 관계 좀 정상화시켜 주세요. 박근혜 정부 이렇게 못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더욱더 12·28 합의에 대해서……

○강창일 위원 그런데 우선 아셔야 돼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아베 정권이 일본인의 애국심을

선동하면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건데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에요, 한국 정부가. 자꾸 놀아나. 특히 외교부가 그래요. 자국,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본 내부용라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한일 외교 본질에 자꾸 갖다 놔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강 위원님도 많이 중시하시듯이 위안부 문제도 잘 풀리고 또 북핵 문제도 협력을 잘하고 한일 관계도 더 강화시키고 이러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하나 참고로 물어봅시다.

일본 가서 일본 한일연맹 간부들을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는데 주한 일본대사 빨리 귀국시켜 달라고 얘기할까요, 말까요? 빨리 시키라고 얘기할까요, 말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일 관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주 당당한 입장에서……

○강창일 위원 저는 가서 이렇게 하렵니다.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정경 분리하라.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양국 경제 관계도 있고 정상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뭐 그리 쏘쏘하게 말이야 대사……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께서 좋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장관도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강창일 위원 장관도 위안부 문제 가지고 자꾸 발목 잡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날 때 어떤 얘기할까 그건 나중에 누구 실무자 보내서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법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요구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외교부가 항소했어요.

그런데 문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해 버렸어요. 왜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 오전에도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5년 하고 나서 파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교부는 관례적으로 그러한 재분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 오래된, 장기간 보유하는 문서로 하고 있고 나중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창일 위원 파기하려는 것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강창일 위원 그리고 5년도…… 남아 있어요.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2~3년 남아 있거든요. 공개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리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장관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하자 그러니까…… 무슨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 없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공개해요. 왜 자꾸 우리 국회에서 공개하라는데 공개도 하지 않고 왜 그래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여야 이것 떠나서…… 그러니까 이면 문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도 외교장관이라는 걸 떠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상대방이랑 합의를 한 지 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것을 계속 공개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신뢰 문제도 있고……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러면 비공개로 해 줘도 돼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 관계 측면에서 그러한 선례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비공개로 위원님들 보게끔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으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성의 있게, 그래서 직접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설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창일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고 자료내는 게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외교문서는 사실 협상 과정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금 당장에 공개하는 게 어렵다면 국회에서 비공개로 검증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외교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위안부 관련해서 정보 공개 소송도 진행 중인 측면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합의한 지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외교 관례라든가 시기 문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그런 정보……

○김경협 위원 그게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된 내용이다 그러면 외교상의 문제가 생길 것도 없지요. 그게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군사기밀도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검증하고 보고하고 다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런 외교 협상이 이렇게 공개가 될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 정부와……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면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검증위원회 구성해서 비공개로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그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속 시원하게 신뢰를 갖고 얘기하겠느냐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지 들어서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협상 과정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문제가 되고 간에 그런 차

원에서의 얘기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직까지 외교부에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차피 모든 것은 역사에 하나의 문서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상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충실하게 임했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정부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정부에서 보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명제라는 차원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하여튼 그것은 비공개 검증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특임공관장 임용할 때 자격심사를 외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청와대에서 검증을 아주 개인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민감한 측면을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청와대는 법외 검증이고 하자 유무 검증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외무공무원법에 외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유재경 대사는 외교부에서 아그레망 요청하기 전에 자격심사를 하지 않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무공무원 출신의 공관장들과 특임공관장들의 경우에는 자격심사 하는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특임공관장들의 경우는 그 시점이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모든 정부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저희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외교부에서 공관장 인사안을 작성해서 자격심사를 했어요, 작년 초에. 그리고 외교부장관이 이걸 보고받아서 청와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심사가 됐던 후보는 청와대에서 배제가 되었고 갑자기 유재경 씨로

바뀌어서 내려온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관장 인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대개 복수로 추천되는 경우도 많고 또 단수로 추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런데 외교부에서 처음에 자격심사를 할 때는 유재경 씨는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임공관장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그것이 확정된 인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검증 과정에서도 많이 탈락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협 위원** 장관님, 내가 질문을 하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외교부에서 당초에 공관장 인사안 자격심사를 했을 때에 유재경 씨는 그 후보가 아니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왜냐하면 특임공관장들의 경우는 우리가 올리는……

○**김경협 위원**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격심사를 할 때요. 작년 1~2월 달에 자격심사 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우리가 올리는 것과……

○**김경협 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내용인지 아세요?

그런데 처음에 외교부에서 자격심사를 할 때 유재경 씨는 그 후보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격심사를 해서 외교부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유재경 씨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갑자기 유재경 대사로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임공관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한테……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인사권자한테 적절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김경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자격심사는 저희가 외교부 공무원처럼 사전에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결정되는 유재경 씨 같은 경우라면 그건 또 그 이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후에 하는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검증은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저희의 자격심사라고 그러는 것은 자질이랑 역량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김경협 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아직까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곳곳에 인사 사고였고요. 그다음에 인사 검증을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하고 외교부에서 자격심사를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분야가 다른 문제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저희대로 철저히 하려고 그러고요.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자격심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아그레망을 요청했다가 아그레망 승인이 떨어지면 사후에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후에 심사해서 만약에 부적격으로 판정 나면 아그레망 취소하고 또다시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에서 자격심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걸어왔던 경력을 보게 되면 민간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해 온 사람으로 일단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검증과 저희가 보는 그러한 관점 이런 것이 다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그레망 같은……

○**김경협 위원** 참 아주 장관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답변할 내용인가요?

○**위원장 심재권** 장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핵심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김경협 위원** 이렇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외국의 특임공관장을 아그레망 요청할 때는 충분히 자격심사 정도는 해 가지고 적어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외교적인 예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이런 것은 많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아그레망 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철저한 검증도 없었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리고 또 최종 임용은 결

국은 아그레망 이후에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지금 현재 특검 조사 결과는 최순실이 면접을 봤고 이력서를 받아서 청와대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외교부에서 자격심사 했던 후보는 싹 제치고 새로 바뀌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외교부가 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다시 자격심사를 하고 아그레망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잘했습니까? 이게 적절했다고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드린 것처럼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김경협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민간인 출신을,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추천하게 되면 으레 사전에 주로 검증을 하고 또 외교부의 경우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자격심사를 하게 되면 최종 단계에서 임용하기 전에 문제가 된다……

○**김경협 위원** 외무공무원법에 자격심사를 외교부에서 하도록 한 이유는 뭐니까? 법적으로 자격심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아그레망 요청한 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러한 과정이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다고 하면 또 그것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임공관장 제도의 성격상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위헌성을 가지고 적용돼 왔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특임공관장은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반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안 느끼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로서는 이것이……

○**김경협 위원** 적절했다고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이 무슨 그동안에 논의됐던, 논란이 됐던 최순실 사태와 연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외교부의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분야에서의 유능한 분이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될 수도 있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그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슨 누가 뒤에 있건 없건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경협 위원** 그 민간 분야에서 유능한 분이라고 하는 게, 본인 스스로 ‘자격이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이렇게 해서 문자까지 보내고.

자기도 놀란 겁니다.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문자까지 보낸 사람에게요. 그런데 외교부는 이걸 자격이 있다고 자꾸 우길 겁니까?

그리고 문제는 외교부가 이런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지요. 일말의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절차 자체는 벌써 참여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동일하게 적용해 오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는 계속 운용을 통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김경협 위원** 아니, 이전의 정부에서 최순실이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이력서 받고 면접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순실 씨랑 연결시키시는 것은, 이번 저희하고는 일단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는……

○**김경협 위원** 외교부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그대로 방치되고 해 왔던 거잖아요, 지금.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김경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은 앞으로…… 최순실 사건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측면을 촉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또 보완해 나가면서 비록 오랜 동안에 걸쳐 가지고 유지돼 온 관행이라 하더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외교부 후배 공무원들 보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리고 외무공무원법상으로도 임용 이전에 심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절차를 묻는다든가 무슨 제도를 묻는다든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묻는다면 그런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안과는 별개로 ‘그런 절차다, 무슨 당시 상황이 어땠다’ 왜 그런 이야기로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달에 심재권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3당 간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거기의 공화당 의원들이나 또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기회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소집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 부분이 강력한 국제 공조를 외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태규 위원 그리고 외교부가 오늘 2017년 업무보고에서, 그 첫 장 맨 위에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외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안보와 경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대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합니다. 사안별, 부처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졸속으로 해치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뒷감당은 모르쇠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외교고 대외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하명 외교가 아니라 전문 외교관의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부각시키면서도 사드 확정 배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FTA 재협상, 환율 문제 등 자국에 유리한 의제들을 관철시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도 있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과도 밀접한 사안인데 중국과의 외교적·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해 주고 GSOMIA까지 체결해 주었는데도 일본은 12·28 합의 정신을 뒤집는 발언들을 이어 가더니 부산영사관 근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을 무산시키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줄 것 다 주고 뺏까지 맞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시작된 중국의 졸렬한 보복 행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7개월 동안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43건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속

수무책으로 매 맞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가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대외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대외 정책을 거듭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려 했으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제대로 추진해야지, 그래야 사드 배치 결정 여부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할 명분과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기습적으로 결정해 놓고 결정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중국 정부에 핵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역할을 주문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해서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재고할 수 있다고 중국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만 요구하고 보복 행위는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이성에 호소하고 정면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주문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사드 배치만 외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과의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에 이어 국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GSOMIA까지 체결해 주고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통화 스와프를 얻었습니까, 더 이상 독도 문제에 대해 생떼를 안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위안부 전쟁범죄에 대해서 진솔한 사죄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을 적극 펼치고, 아베 총리는 10억 냥이니까 성의 보이라며 당당하고, 아소 다로 부총리는 ‘한국에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겠느냐'라며 우리 정부를 비웃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책잡힌 말 못 할 이면계약 없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한 외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외교부처 따로, 국방부처 따로, 경제부처 따로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별로 자신들의 현안만 각각 해결하려다가는 결국 밀리고 다 내주고 말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튼튼한 한미동맹의 재확인 속에 동북아시아 역학 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 외교·국방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를 충분히 이해시킨 가운데 사드 배치나 방위비 분담, 한미 FTA나 통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동해서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입각한 대외 정책에 대비한 관련 부처 종합 태스크포스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외교부가 주도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외 전략을 세우고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성과나 과정, 모든 측면에서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평가를 기대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다하고 있다는 이런 일반적인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중에서 사드 관련해서 비록 공식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부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레벨에서 사드 관련된 비공식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중국 측에다가 전달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은 또 서울본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중대사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특히 경제부처 같은 경

우는 아주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면서 얘기를 했고, 또 저희도 최근에 있었던 고위급 레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외교대사가 트랙2, 트랙1.5 차원에서 주요 연구소의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을 갔다 와서 광범위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의회, 학계 사람들과 만나고 또 공공기관 세미나도 갖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한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왔고, 또 3월 달에도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연간 일정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또 코리아파운데이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한국에 오는 많은 고위 인사들을 거의 가능하면 다 만나고 이런 공공외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년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외교부에서, 또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마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냉전 종료 후에 가장 어려운 그런 외교·안보 여건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북핵 관련된 외교에서도 국제 공조를 가장 최고도로, 가장 높은 강도 있는 그런 공조 체제를 만들어 냈고, 또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관계로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어려운 관계는 안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미 관계는 더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만들고, 특히 글로벌 위기에서는 아마 전례 없이 저희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10여 개의 의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외국민 영사 분야에서도 다소 사건들이 최근에 있어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만 재외국민 시대에 저희가 맞춤형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데보다는 앞으로 국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태규 위원 장관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 주변의 중국, 미국, 일본과의 이런 관계들이 뭐 하나 지금 원만하게 풀려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을 적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마찰을 겪고 있고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런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방한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경청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많이 듣고 갔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당장 현재의 상황을 주로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좀 길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준다고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결과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줄지 않았습니다. 춘절에도 줄지 않았습니다. 또 4년 동안을 통계 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국 방문했던 중국 사람들이 600만 명입니다. 왔다 갔다 한 게 600만 명입니다. 지금 1200만 명입니다. 중국 사람들 800만 명이 왔고 저희가 400만이 갔습니다. 거시적인 지표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틀은, 큰 기동은 유지가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이런 4년 동안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특정 시간에, 특정 시점에 스냅샷 입장에서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어려운 과정을 같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주미안마 대사 임명 관계해서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공관장 자격심사를 작년 2016년 4월 14일 날 하셨습니다. 자격심사한 뒤에 장관이 보고받으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 기억에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청와대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은 인사 실무자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것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희가 외교부 인사운영팀의 정식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자격심사 결과를 별도로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격심사가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상황 증거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에 충실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계속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되도록’이 아니라 이견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박병석 위원**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24번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중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몇 발 쏘서 몇 발 성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무수단은 작년에 여덟 발 쏘서 한 발 성공했구요.

○**박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여덟 발 쏘서 한 발 성공했는데 어제 쏜 것은 금년에 첫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지금 지적하다시피 액체가 고체로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2270이나 2231의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졌다,

베리 베리 하이 프라이어리티(very very high priority)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서는 주말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는 주말 끝나자마자 긴급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또 앞서 지적인 대로 트럼프와 아베 두 분은 한밤중에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이것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했는가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의 정당성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이 직접 이해 당사국으로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주장할 때 국제적 동조를 얻는 것이지 어떻게 세계 각국이 한밤에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저는 권한대행의 문제도 있지만 외교·안보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대통령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제시했던 참모들,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큰 것이지요. 김관진 실장이나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중에서 적어도 ‘이것은 황 대행이 여셔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을 가늠 짓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왜 그런 건의를 안 하세요?

장관께서 자꾸 상황에 따라서 안보실장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박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도발이 있을 때 이것을 중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안보실장 주재 NSC 체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간에 이러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NSC 안보실장의

보좌를 잘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려진 후에 거의 한 시간 반도 안 돼서 회의를 소집을 했고 즉각적인……

○박병석 위원 잠깐. 장관께서 아까 앞에 답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박병석 위원 저는 제가 장관이라면, ‘황 대행이 주재하라고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이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직한 입장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도발의 위험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우리……

○박병석 위원 아니, 자신의 문제이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데 외국의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한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유엔 안보리가 긴급소집이 되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대통령 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대통령 공백 상태인데 국가안보실장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그냥 장관께서 ‘우리는 그렇게 그 당시에 판단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의 상황에서 판단해 보니까 황 대행께서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아까도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이인영 위원 저는 그건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 이태규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전달을 해 드리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때 분명히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박병석 위원 전달도 필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교·안보팀,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외교·통일·국방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 한 분 정도는 ‘이것은 권한대행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주장을 했어

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항상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초기 단계에서의 성격 규정이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기 단계부터 이것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나와야 될 상황이나에 대해서 좀……

○박병석 위원 시간 때문에 한 말씀 더 하면, 어제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베 수상이 한 얘기는 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사자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마디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그 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티스 장관이 왔을 때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힐러슨 국무장관이 저한테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따로 밝혔고……

○박병석 위원 그것은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실제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행위를 저지른 이후 아닙니까? 그것이 전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바로 어제 오전에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한 후에 저희 김관진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움직임은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국활용론과 선제타격론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은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걱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윤 장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믿겠지만 걱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했던 것을, 그 기초를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의 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넘어서 미·중 갈등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더 큰 걱정은 미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협상을 중시하는 미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어깨 너머로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윤 장관께서는 이 박근혜 정부 4년간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분이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윤 장관의 평가와도 일치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히 뒤돌아보면서 계승할 것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다음 신정부에 그것을 넘겨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북한은 최소한 ICBM을 개발한 뒤에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ICBM을 한 발 더 쏘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준 뒤에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데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미국 내 일각에서도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신정부하에서도 과거보다 더 치밀한 논의를 지금 많이 전개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 한미 공조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런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 저희의 이해가 손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와 긴밀히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소녀상’을 가리켜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상’이라고 부르기로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 제가 다른 질문에 답변하면서 저희로서는 12월 28일 합의에 있는 ‘소

녀상' 표현을 계속 써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 또 견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아베 정부가 소녀상을 위안부상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의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속담에 뉘 눈에는 뉘밖에 안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눈에는 소녀고 무엇이고 여자라면 다 위안부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부산 소녀상이 외교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위반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협약 위반이라는 쪽으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이것이 이제 국제 예양과 국제 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즉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국제 예양의 어느 점에서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 세계, 특히 일본 총영사관이나 일본대사관 앞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미국이든 호주든 중국이든 이 외교공관은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권** 그것은 우리 외교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일본의 눈치를 봐서 하시는 말씀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그런 역사적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반성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조형물이 어떻게 그 공관의 안녕과 위엄을 해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고 자체가 우리 외교부가, 우리 장관께서 잘못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지만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 문건, 이것 보존기간을 5년으

로 지정했습니다. 참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외교부가, 장관께서 참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당장 바꾸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 외교 문서를……

**○위원장 심재권** 그게 걱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 공공기록물 영구보존에 해당되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일 이준규 대사가 지난 1월 6일 민단, 한인회 이 모임에서 '소녀상 문제에 여러분이 항의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철면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아까 오공태 단장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 단장 스스로가 각 민단 간부들이랑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내용이라는 것을 저한테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런데 오 단장 스스로가 바로 무엇을 슬회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 이준규 대사 말씀을 참고로 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게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관 직권으로라도 이 이준규 대사, 소환하고 책임을 묻기를 요청합니다.

이 위안부 문제,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옛그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왜 이런 잘못된 파국이 오는가 생각할 때 북핵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 문제에다가 우리 정부가 뭔가 이렇게 꿰맞추려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양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관께서 패널을 들어 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잘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틀렸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요 강제 동원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배상을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역대 정부가 그것을 못했던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것을 받아 낼 수 없어서 못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베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고,

사과했고……

무슨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 ‘군 관여’라는 게, 아베 총리의 그 언행을 보세요. 그 위안부 시설이 군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과도 그런 인신매매가 일본군 군영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10억 엔도 누누이 일본 당국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배상이 아니다, 위로금이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나 또 사드 배치 문제나 우리 외교의 대참사라고 보고 우리 외교부에서, 최소한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그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잘못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길만이 그래도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장관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단문으로 질의할 테니까 우리 장관께서 단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현안으로 있던 것이 이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 장관! 본 위원이 지금 단문단답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배상청구권 소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현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훈 위원** 답변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소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훈 위원** 어디하고 소송한다는 거예요? 누가

소송하는, 당사하고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슨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소송 문제가 있으니까……

○**설훈 위원** 이 문제를 외교장관이 답변을 못 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멸되었다 안 되었다, 모른다 이거예요?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뜻대로입니다.

○**설훈 위원** 답변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답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묻는데 그게 무슨 답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니까 이 소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관련성이……

○**설훈 위원** 자, 언급 안 하겠다 이것이지요? 알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설훈 위원**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93년의 고노 담화 이후로 강제 동원된 것으로 일본 측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15년 12월 28일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보면 강제 동원 안 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제 동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12월 28일 합의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동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아베 총리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다는 것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한, 발표를 한 것을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게 되면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설훈 위원** 그래서 강제 동원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

그 고노 담화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집·이송·관리 과정에서 그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래서 강제 동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강제성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설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요.

○**설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그런, 현재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뭐 저희가 입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훈 위원** 알겠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다가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물었는데 기록물 보존법에 보면 5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구보존을 하도록 한 이유는 그것은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보존하라는 것은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폐기해도 된다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12월 28일 문건에 대해서는 5년 보존기간 쪽에 넣어 놓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법률 위반 아니에요? 시행령 위반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상 저희들 외교 관행은 재분류 기한이……

○**설훈 위원** 왜 구분해 놓았어요? 영구보존과 5년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장관 얘기대로 하려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랑 같아요. 5년이나 영구보존이나 같다는 얘기가 돼요. 왜 5년으로 또는 영구보존으로 구분해 놓았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이 문건은, 이 내용은 영구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시행령 위반이 돼

요.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보건대, 본 위원이 볼 때 장관께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설훈 위원** 아니, 5년과 영구보존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떤 보안 규정적인 측면에서도 실무자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설훈 위원** 실무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그런, 나중에 그것을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취지로 여쭙보신다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훈 위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장관도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장관 답변하는 것을 보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장수 장관의 처신 방법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외교가 맑아집니다.

최순실 사태, 그 유재경 대사……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특검에서 다 밝혀 놓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관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 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부 차원에서 또 장관 차원에서 취할 조치가 있으면 저희가 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하시겠습니까마는 좀 더 그 결과를 봐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국민이 바보고 국회가 바보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유재경이 어떤 일을 했고 최순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자백했잖아요? 그쯤 되면 장관께서 ‘아, 이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훈 위원** 무슨 절차의 문제예요, 이게? 상식의 문제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런 법률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는 그런 법률적인 것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결과를 보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훈 위원** 답답 정도가 아니예요. 참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인정할 줄 알 때 그때 제대로 된 방법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장관님 좀 간단하게 여쭙어볼 텐데요.

소녀상이 위안부상으로 바뀌는 것은 현상의 변동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그런……

○**이인영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니, 현상의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현상 변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영 위원** 합의 문구의 변경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저희가……

○**이인영 위원** 소녀상을 그러면 소녀상이라고 써 놓고 위안부상이라고 읽어야 돼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니,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앞에서 문서로……

○**이인영 위원** 그거예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합의 문구의 존중이 아니라 변경이잖아요. 현상을 변경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지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현상 변경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소녀상 이것을 그냥 계속 고수하겠다 이렇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현상 변경을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맞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수상이 ‘어떠한 흔적도, 어떤 기록도 발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노 담화에서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했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동안의 정신들 이런 것들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경의 시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이인영 위원** 아니,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한일 외교정책에서 지켜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들이 변경을 시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지키는 입장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지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이인영 위원**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우리 외교부가 뭐 하러 있어요? 아니, 그것은 그냥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아니예요? 일본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외교부는 현상 변경 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싸움박질 안 하고 우리는 기존의 합의 정신을 지켜 나가고 그것을 일관되게 고수한다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있는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고노 담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인영 위원** 아니아니…… 장관님,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또 제가 결례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나 국민들은 외교부의

입장을 백번 존중하더라도, 그런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한 발 더 나아가라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역사의 당당한 자부심을 지켜 주고 실천해 달라는 거예요. 판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판청 부리지 마시고. 왜 그것을 못 알아듣고 그러세요?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판청 부리시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이인영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것과 관련한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소녀상 문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재일동포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재일동포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무슨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까, 이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니, 그 문제는 오 단장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있어서……

○이인영 위원 오 단장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가 한 얘기잖아요? 왜 오 단장을 끌어들어요, 거기다? 또 판청 부리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 단장 얘기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를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 단장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번에 민단에서 결의한 이 내용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에 12월 28일……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준규 대사가 오 단장을 사주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준규 대사 자체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무슨 당구에서 쿠션 치듯이 그러지 마시고, 이준규 대사가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인정 안 하세요?

아니, 지금 외교부장관님이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나와서 하시는 그 점잖은 화법, 간접화법, 예절 바른 화법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주일대사 그 발언이……

○이인영 위원 주의라도 주셨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확히 어떤 취지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또 그 발언 표현이 정확한 것인지는 제가 좀 더……

○이인영 위원 1월 6일 날 한 얘기를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국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더 본질적인 파트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준규 대사가 이렇게 재일거류민단에다가 압박을 해서 한 것으로……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냥요 저 사정을 확인하시고 다시 서면답변을 하시든지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인영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얼마나 군색한 얘기 하고 있어요, 오늘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KOICA 이사장님, 다시 하나 여쭙어보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이리로 나가서……

○위원장 심재권 예,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KOICA 이사장 김인식입니다.

○이인영 위원 나오시면서 그냥 들어 주셔도 좋은데요.

모 종편 방송에서 ‘어떤 회의에 최 씨의 미안마 파트너인 인호섭 씨가 동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정만기 당시 비서관—현 산자부 차관—이 김인식 이사장에게 K타운 사업권을 인 씨 측에 주는 것으로 하자 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만약에 사실……

우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이게 인 씨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쪽 미안마 정부 측에서 저것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무상의 경우는 KOICA가 해야 된다, 만약에 미안마 정부가 하려면 그것은 차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구먼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아니, 미안마 정부의 요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만기 비서관이 미안마 정부가 이런 요청을 하니까 K타운 사업권을 인 씨 측에 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인 씨 측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측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인영 위원**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랬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오후 첫 질의할 때 안중범 수석의 말을 받아서, 어떤 오더에 의해서 정만기 비서관이 미얀마의 K타운이나 아니면 컨벤션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중용 같은 것, 역할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그럴 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황적으로 상당히 상충하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협의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 당시에는 저는 협의를 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허, 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끝으로 장관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혹은 재외동포들의 어떤 피해 사례 같은 것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새로운 조치에 의해서 영향 받는 저희 재미 동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유학생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 외교부 내에서도 보고 있고, 또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각 주요 도시라든가 주 단위에서 혹시라도 어떤 피해 받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공관에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영사국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사례 수집하신 것은……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사례라기보다,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체포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앞으로……

○**이인영 위원** 예방 대책……

○**외교부장관 윤병세**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서,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시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지 않고 저질러진 다음에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만 이것이 특정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우리가 한미 간에 굳건한 동맹이라는 점 그런 것을 백분 활용하세요, 그런 데에다가.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저희가 그것이 구체화되는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사전에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KOICA 김인식 이사장 추천 관련해서……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KOICA 이사장 김인식입니다.

○김경협 위원 혹시 이사장 임용 과정에 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출석 요청이 온 적이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직 없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김경협 위원 2012년 10월부터 한독경제인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한독경제인회에서 연 몇 회 정도 모임을 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정기 모임은 연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년회를 하고 그다음에 간부들만, 임원들만 월 1회 정도 만납니다.

○김경협 위원 월 1회 정도, 간부들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특검에서 얘기했던 이상화 본부장·최순실·유재경 등등 이렇게 모인 날 이것은 지금 환송식 날이라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유재경 대사 출국하기 전날로 기억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특검에서 그렇게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날짜를 얘기한다는 이런 건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혹시 그 날짜가 정확히 며칠인지 기억을 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나흘 후에, 5월 17일로 기억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5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5월 17일로 기억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17일 정도예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때 50대 후반의 여성,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여인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누구인지 몰랐다 이런 얘가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화의 진술, 특검에서 했던 이상화의 진술을 보면 최순실·유재경·이상화·김인식이 함께 만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저녁에 거의 식사가 끝날 무렵에 그 여자분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잠시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방 또 파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저도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김인식 이사장께서 그쪽에,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했던 기간, 한독경제인회 창립하고 회장으로 즉 취임해 있던 기간, 이 기간에 보면 최순실 씨, 유재경 그다음에 권오준, 이상화 씨, 대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들이 프랑크푸르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반드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 기간, 근무기간이……

○김경협 위원 정확히 기간이 딱 일치한 것은 아닌데 대체로 그 시기에, 이렇게 근무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렇다고 그래서……

○김경협 위원 물론 먼저 시작하는 사람 있고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 있고 좀 나중에 끝난 사람도 있는데 그게 거의 비슷하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저는 그 당시에 유럽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유럽을 상대로,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친선이라든가 그런 거랄지 뭘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많은 후배들은 저하고 근무기간이 겹치지를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최순실 씨는 2003년 6월에서 2005년 9월까지 럭셔리무역유통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고—물론 비텍스포즈 2015년에 또 있었습니다마는—그다음에 이상화 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근무했었고……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 기간은 제가 겹치지를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독경제인회였고.

그다음에 포스코 권오준 씨, 2003년부터 2006년까지—여기는 겹치는 기간인데—포스코 유럽본부장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포스코 회장이 됐고, 유재경 삼성전기 상무지요. 거기의 유럽법인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해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 기간도 저랑 겹치지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때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최순실 인사 추천 사례로 계속 죽 얘기가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인식 이사장이 같이 끼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위원님, 저도 잠시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예.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공직자도 많고요 저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최순실 씨에 의해서 그렇게 의도로 움직여졌다면 저는 사실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막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저 혼자 막은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제가 제 입장을 지켜 왔습니다.

○**김경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KOICA 담당했던 이용수 전 개발협력국장, 지금 보니까 개발협력국장이 아닌데 혹시 이용수 개발협력국장 나왔어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이용수 전 개발협력국장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 당시에, 작년에, 그러니까 KOICA 이사장 추천 당시에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니까 민간 임원추천위원 5인과 그다음에 비상임 임원추천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비상임 이사로, 민간 임원추천위원 5인 중에서 2명이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그렇지요?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화여대 교수가 나름대로 또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추위 위원으로 이화여대 교수가 두 분이 같이 들어갔는데 혹시 이때 민간 임원추천 위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아세요?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임추위 구성은 KOIC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KOICA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압니까, 이것? 혹시 김인 전략기획이사님 아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예, 김인입니다.

○**김경협 위원** 잠깐, 그러면 혹시 전략기획이사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KOICA 전략기획이사입니다.

○**김경협 위원** 이때 민간 임원추천위원 2명을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KOICA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한 이유는 김은미 교수는 오랫동안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장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ODA를 이끌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신혜수 위원님은 유엔 여성, 평화, 세계 인권 문제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국제협력 분야의 저명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최순실 씨와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이고, KOICA에는 25년 이상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분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여기 추천했던 김 모 교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모티브가 됐던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 프로그램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분이고, K-밀 사업 관련해서 이화여대가 주도하도록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추천인지, 그것은 KOICA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KOICA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국제협력학회 학회장으로서도 오랫동안 기여를 하셨고, 소녀들을 위한 삶 구상은 김은미 교수가 했다기보다는 저희 외교부와 KOICA에서 구상을 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사장 모집공고 기간이 규정에 는 일주일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예, 그렇습 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특별 규정도 있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특수한 상황에 해당이 됐습니까, 이게?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관장 선발이라든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가 사실은 원래 준정부기관으로 되다 보면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희가, KOICA가 준정부기관으로 2월 달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선에도 많은 혼선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체적으로 인선이 늦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선을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다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가 못 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모집.....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예.

모집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데 6일만 했고, 그 것도 6일 중에서 보니까 4일은 또 공휴일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틀밖에 안 된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그래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경쟁에 참여를 하셨고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인선할 때는 열 분이 면접을 했고요. 다양한 심사를 거쳐서,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네 명을 추천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예, 그렇습 니다.

○**김경협 위원** 네 명을 추천했는데 김인식 이사

장에 대해서는 ‘KOICA 기관장으로 적절하다’ 이 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추천을 했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김인식 이사장이 선택될 수밖에 없도록 이 추천서에 보 니까 되어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추천서에다 가 어떻게 쓰는가는 저희 KOICA에서는 알지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추천서는 어디에서 작성 했어요?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위 원님, 그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고, 순위 없이 무순위로 네 명을 추천했습니다. 4배수를 추천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가나다순으 로 추천했습니다.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아무런 코멘트 없이, 아무런 평가 없이 무순위로 그렇게 네 명, 4배수를 추천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네 명 추천했는데 한 명 은 ‘KOICA 기관장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해 놓 고 나머지는 다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뻔하지요.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그 령지 않습니다. 아무런 평가 없이 그렇게 추천했 습니다.

○**김경협 위원** 여기 추천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았어요.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임 원추천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코멘트 없이 네 명의 이름만 추천했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외교부가 발표한 외교부 복무기 강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복무기강 강화 방안을 보았습니다. 기 강을 세우려는 고민이 담겨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직의 명예와 지향 가치가 보이지 않 는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감시·감독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인데 180개가 넘는 해외 공관을 상시적으로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지—더군다나 성희롱 같은 사건은 은밀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는 범죄 일 텐데—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성희롱·회계 비리 등 이러한 외교부 직원들의 사건 사고가 개인의 일탈인지 외교부라는 조직의 기강과 인습이나 문화와 연관된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없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처벌과 감시는 당연한 것이지만 현상에 대한 대중적 요법이라는 점에서 상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중요법에 치중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방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조직에서 퇴출시키면 되겠지만 오랫동안 조직 내에 자리 잡은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나 도덕적 규범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면 조직의 기강과 문화를 일신하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외교관의 선발과 임용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등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의 공관도 있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외교관의 자존과 명예를 지켜 나가는 방안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품성과 역량 그리고 조직의 기강과 전통, 문화가 결합돼야 한다고 보는데 외교부의 대책에는 이러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외교부의 명예와 자존감을 살리고 새로운 조직의 기풍과 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신가요?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예.

○이태규 위원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관으로서의 청렴과 자제, 절제 등을 위해 외교관 선발 및 임용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복무 강화 방안의 주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실·국장 중에서?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윤덕민입니다.

저희는 후보자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후보생 들한테 1년 동안의 교육과정 속의 10%를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복무기강 강화 방안을 만든 주무실·국장이 어떤 분이신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인사국장도 관여하고요, 또 도와주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우선 인사국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번 복무 강화 방안 마련하면서 해외공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부 본부 직원들과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봤습니까, 왜 외교부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함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외교부 인사기획관 조구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했는지, 해외 공관에 공문을 보내서 조직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성희롱 문제나 회계 비리 문제나 이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대책으로서 여러 분들의 견해나 이런 것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또 수렴한 해외 공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대안들 그것을 토대로 본부 직원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 봤는지, 그리고 나온 대책이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사건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인사기획관께서 혼자 하신 것이에요, 몇 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책상에서 회의해 가지고?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관련된 과장급 직원 들하고……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대책 가지고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아 온 외교부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우리 내부의 시각보

다는 외부의 시각 그리고 외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두 분과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에 때문에 그분의 시각으로 프레시(fresh)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보는 것, 그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내부 조직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의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외교부 조직에 이런 기강 해이가 일어나는지, 왜 외교관으로서의 자존과 명예를 훼손하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반복돼서 발생하는지, 그런 내부 분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니까?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내부 원인을 알았다면 벌써 다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조직이 왜 이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어야지요. 공관들한테 ‘당신들은 해외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 직원들이 우리 조직이 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토론을 해봤어야지요. 그런데 내부에서 찾기 어렵다니, 그것은 인사기획관께서 못 찾은 것이지……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외부 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내부적인 토론을 추가로 거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컨설팅을 지금 맡기셨다는 말씀이지요?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여성가족부라든가 성문제연구소 또 양성평등연구원 이런 데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두 분께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 종합대책은 추후에 다

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외교부인사기획관 조구래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약식 보고서 형식으로 이런 것 가지고, 적어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래 가지고 외교부의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갈래에서 기강 해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지금 KOICA 이사장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KOICA 이사장이 외교부 내 출신 인사가 아닌 외부에서 온 사례는 처음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 현직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KOICA도 계속 업무가 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에 대해서도 개방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하여간 응모를 일주일 했는데 사실상 그때 어린이날 뒤 이렇게 해서 휴일을 빼면 3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자리를 무슨 야반도주하듯이, 아니면 군사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상황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또 이때 뉴스를 찾아보니까 ‘KOICA 이사장 공모 기간 불과 3일…… 수상한 공모 모락 모락’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기류 등이 짙어요.

지금 제가 이사장님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사장 공모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일반적인 보편성을 상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KOICA 이사장님이 아니라 외교부가 해소를 시켜 줘야 될 책임

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앞으로 이제……

○이태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사실 전·현직 외교대사를 만났을 때, 우리 KOICA 이사장님이 4명 만났는데 2명이 유재경 씨하고 전대주 씨하고, 다 최순실 씨하고 관계있는 사람만 만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와서 만났다고요. 나는 그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또 유재경 씨도 자기가 부임도 하기 전에 와서 만나고. 이것이 다 최순실 씨 오더 받아 가지고 와서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직책·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KOICA 이사장 김인식입니다.

사실 전 대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 대사가 한참 끝난 후에 잠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유 대사는 후배기 때문에, 저희 한독경제인회 후배기 때문에 떠나기 전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한독경제인회 하면서 바꾸니 엮듯이, 그것은 사실 아닌 면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정병원 동북아국장님 계세요?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동북아시아국장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입장을 내 놓았어요.

거기 보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 조선의 모순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한국과 북한의 문제, 한·조의 모순.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발표와 같은 기초입니까, 좀 다른 데가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 못 하시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 문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는 6자회담의 주요한 당사국이자 또 의장국이면서도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을 북한에 우선 일차적인 원인을 두면서도 또 북·미 관계의 갈등에서 찾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인용하신 그것 중에 첫 번째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는 것은 아마 그러한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큰 차이 없는 같은 기초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항상 그 부분은 매번 자주 나오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아직 미국 트럼프의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조야에서 중국 역할론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중에서 중국의 왕이 부장이 강조했던 대화의 재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논의,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대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9·19 공동성명 당시에도 평화체제 문제는, 형태도 별도의 포럼에서 하기도 했지만 시기 측면에서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된 후에 우리가 검토하게 됐던 것인데 중국 측의 입장은 지금 그것을 상당히 앞당겨서 하자는 입장이라서 한·미·일 입장에서는 그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의 우려는 동시에 같은 테이블에 놓았을 경우에는 평화협정을 질질 끌으로써 오히려 핵개발을 할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본말이 전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의 레드라인이 어디냐, 또는 목표가 뭐냐?

미국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게 되면 또는 개발이 임박하게 되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니까 레드라인이라고 보이고요, 북한으로서는 우선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개발한 뒤에 협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고지에 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레드라인 개념은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북한이 항상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표현을 안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경고 시점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각종 군사적 억지에 관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또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미국이 강조하는 중국 역할론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어야 되고, 그 주장을 미국과의 공동의 목표로, 전략으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장관께서야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공통의 목표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정권의 공백기가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염두에 두실 것은 지금까지 햇볕정책도 그리고 압박 정책도 모두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판단 위에서 압박 일변도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하고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졌다고 보임에 따라서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국가안보를 분명히 하고 또 한미동맹 관계 이런 것도 강화하면서 하여튼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승사자(Grim Reaper), 소위 각국에 대한, 특히 핵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종합적 제재를 논의하는 기구, 그것이 이번 달에 우리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실무자들 회의입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제재 같은 경우는 전문적·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의를 하다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저희 차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게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회의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방국들 간에, 특히 이런 안보리 결의 이행 또 독자제재와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크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이분들이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분들이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 비공식으로라도 설명을 함으로써 우려를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것은 관련 동향이 있는 대로 직접 찾아뵙고 관련 간부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저 또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인영 위원님께서 두 번, 세 번, 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소녀상을 위안부상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12·28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관 답변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명백히 12·28 기자회견문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소녀상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어떻게 그게 우리 외교부가 보일 반응입니까? 일본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최소한 ‘12·28 기자회견·공동회견 위배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치졸하게 다시 회피하고 또 호도하려는 이런 행위라고 규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유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호치민 총영사관의 김재천 영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일종의 내부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상은 못 줄망정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빠르면 금년 6월, 늦으면 8월·9월까지 하겠다. 그래서 조기 선거를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해 놓겠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관께서도 여기에 동의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군 당국에서……

**○설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군 당국에서 일단 금년 중에 가급적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미국이랑 공유하면서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영상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 미국 정부는 2017회계연도에 한국에 사드 배치할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설훈 위원** 2017회계연도에 한국에 사드 배치할 예산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시링, 해군 중장입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입니다. 이 양반이 한 답변이 있습니다.

‘It’s not off the table in any respect, but not included in this year’s budget.’ ‘어떠한 측면에서도 한국 사드 배치 예산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용 보면 2017년도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빠르면 6월, 8·9월까지는 한다. 물론 10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예산 짜 가지고. 그래 봐야 빨라야 연말, 아무리 빨라도 연말 이전에는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하는 것 우리 돈 들여서 할 것입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장관이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니까…… 이것 모르고 되겠습니까? 사드가 어떤 문제입니까? 중국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참…… 주무부처입니다. 국방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로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훈 위원** 이게 어떻게 세부적인 사안입니까? 미국 예산에 짜여 있는지 안 짜여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3억 7000달러 있어요. 그것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사드 배치에 들어갈 돈이에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4억 1000달러인가 그랬습니다. 올해 들어 더 줄어 들었어요.

3억 7000달러 가지고 사드 배치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저 위에 나와 있잖아, 올해는 없다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배치한다고 텅 텅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배치가 돼요, 돈이 없는데? 우리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 정부도 그동안에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 내 가급적 조기에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조기에 배치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조기에 배치를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세부적인.....

○설훈 위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외상으로 해요? 주무부서가, 주무부처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무슨 놈의 외교가 되고 무슨 놈의 국방이 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훈 위원 이게 국방부가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설훈 위원 외교부는 그냥 손 놓아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내에서 주된 역할이다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무부서가 지금 말씀하신 측면을 다 충분히 감안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계서 솔직한 분이시라면 ‘아, 이것 참 잘못됐구나’라고 자복을 하고 ‘이 문제 전면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정말 토론해야 합니다. 토론하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결정해도 하나도 안 늦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중국이나 주변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사드 배치, 3무라고 안 그랬어요? 그것 제대로 된 정책이에요. 그대로 가면 돼요. 왜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왜 갑자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순

실이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위원장 심재권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3무로 가다가 갑자기 결정한 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장관께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이 사드 문제 나오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정부 내.....

○설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얼마나 중국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본 위원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다 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내에서 수없이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계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저희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중국과도 상당한 정도로 소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훈 위원 이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언젠가는 장관이 얘기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정부 때 할 수 있게끔, 이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적어도 장관이 이 시점에서는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결정해도 안 늦다고 얘기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미국 정부가 예산도 안가지고 있는데 8월·9월까지 마치겠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마지막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장관이 곧 임기가 끝날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민족의 안위가 걸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을 갖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쯤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세요. 그래야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역사에서 ‘아, 그때 외교장관은 제대로 했다’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본 위원의 증언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아까 KOICA 이사장 추천 관련 해서요.

이용수 전 개발협력국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추천서에는 추천과 관련된 멘트가 없다고 그랬던가요?

○**위원장 심재권** 직책·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외교부 전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서에는 아무런 평가나 순위가 없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순위…… 그런데 별첨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추천 사유 그래 가지고 의견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KOICA 기관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딱 이렇게 적혀서 올렸습니다. 이것 내가 자료를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없다고 아까 혹시 주장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차석대사 이용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북한의 대외 발표 내용 그리고 태 공사의 증언을 들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외 발표 내용을 봤더니 주로 미국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성명서인데 그 성명서의 주장을 갖다가, 이것을 보고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더 최신 사항이라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은……

그런데 북한의 비난 성명의 내용을 가지고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는 안 될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태 공사의 증언도, 아마 북한을 떠난 지 몇 년 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 실정을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KDI 연구원들의 보고서입니다.

이번 2월 5일 날 북한경제리뷰에 KD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북제재에도 북·중 무역은 작년 2016년에 오히려 7.3%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은 14년·15년 연속 하락세였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작년 16년에는 오히려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6.1% 증가했고 수입은 8.3%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7.3%가 증가했다. 발전량이 증가하는 등 생산과 소비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성적 약점이었던 식량 생산도 7%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 경제가 취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KDI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북측하고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접경한 지린성 정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고 향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용어 자체는 제가 자주 들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김경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고서의 내용은 북한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15년보다도 2016년에. 가장 세다는, 최대의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의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겨우 지금 북한의 대외 발표, 비난 성명을 근거로 하고 있거나 태 공사의 증언, 북한 떠난 지 오래되신 분.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의 북한 경제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대북제재, 당연히 해야 될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북한 경제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핵·미사일 도발에 당연히 단호하게 해야 되고 제재 강화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재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은 대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게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오로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그 보고의 근거는 대단히 취약하거나 거의 믿을 수 없는 근거들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김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예.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도 그 KDI 리뷰를 포함해서 통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 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북한 내부에서 보는 여러 시각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과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민감한 첩보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지표에 주로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것은 하나의 지표로서는 참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돌아가는 그런 현 상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무역이든 운송이든 또 인적 교류든 군사·경찰 협력이든 또 선박 운송이든 항공이든 외교적인 고립이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것을 저희가 아주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 볼 때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진전이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통계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하면서 여

러 가지를 지금 차단시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위원장 심재권 1분만 더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이렇게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이 작년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중국과의 북·중 무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부가 아예 본격적으로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재의 뉴스들이 과연 대북제재의 효과를 얼마만큼 발휘하게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외교의 정책이…… 제가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했던 이유가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를, 중국에 협조를 더 구해야 되는데 중국이 오히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여기에 반발하면서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거나 이완시켜 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외교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 정책은 좌충우돌, 자중지란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1년 동안의 저희 대북 외교는 대한민국 자체의 정책에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 공조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한 국제 공조 체제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얼마 전에 있었던 대만에서의 우리 여대생 성폭행 사건, 그리고 여대생이 대만대표부에 지원 요청을 했다가 박대를 당했다는 것이 신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도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대만대표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를 해 왔는데 실제로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피해 사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대표부도 그렇고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는 것을 독려해서 오히려 대표부에 알려 오고 외교부에 알려 와 가지고 이런 사실을 더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만 쪽 정부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대만 쪽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약속을 받아 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 장관님, 그게 아니고요. 그때 여기 피해 여대생이 우리 대만대표부 직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짜증 섞인 투로 ‘무슨 일로 대표부 긴급전화로 전화를 하셨느냐.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다. 상식적으로 통역 제공은 어렵다. 날이 밝으면 대만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연락하라. 신고 여부는 알아서 하고 신고를 결정하면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다는 것인데 이 여대생이 한 구체적인 용어, 그러니까 우리 대만대표부 직원이 했다는 이 말이 사실이나 이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이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확인했는데 서로 주장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더 서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 이후에 저희 공관 영사들이 병원과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많은 영사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귀국 후에 피해자들도, 피해자 가족들, 특히 부친께서 대표부의 도움에 고맙다는 그런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적인 또……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야 어차피……

해외에서의 영사 업무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될 우선적인 의무는 외교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태규 위원** 사후에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 부모의 어떤 양해를 구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이 여학생이 주장한 내용이 팩트냐, 이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이것이지요.

나중에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지만 만약에 초기에 우리 대표부의 직원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나, 아니냐를 일단 확인해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것이 보도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담당 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아내라. 그래서 지시를 해서 공관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해 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차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교해 보니까 주장에 좀 상충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 여대생도 면담을 해 봤습니까, 피해 여대생도 외교부에서? 그 주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려면 대만대표부의 주장도 들어 봐야 되지만 이 전화를 했던 당사자의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알기로는 직접 면담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사국장,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할 것 있습니까?

허락하신다면 영사국장이 그 사실관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김완중 영사국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여대생을 면담해 봤습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여대생이 실제 자기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비공개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전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관련 사실을 수집해서, 조사해서 지금 대만 당국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나, 아니냐를 이 여대생 주장을 통해서 확인하셨느냐 이것이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실제 첫 번째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여대생이 다시 담당 행정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 유도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행정 직원이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두 번째 녹음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녹음 기록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영사콜센터면 원래 보통 자동으로 녹음이 되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영사콜센터로 오는 것은 녹음이 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첫 번째는 녹음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그것은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것은, 중요한 그 부분은 녹음이 안 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부터는 녹음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대개 담당 행정원이나 담당 영사가 갖고 있는, 밤에 휴대하는 휴대폰은 녹음이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다만 대사관에서 받는 전화는 대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는 없었다……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문제는 없었다, 이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 피해자, 신고자가 만족할 만한 첫 번째 대응이 없어서 그렇게 불만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태도에, 느끼기에 그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사 업무가 저는 굉장히 고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할 때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 업무 운영 실태를 봐도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체포되거나 구금된 총 2968건의—우리 재외국민 중에서—43%인 1275건에 대해서 영사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감사 결과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영사 핫라인 운영 실태를 보면 149개 공관에서 42개 공관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잘못된 번호를 기재했다 이런 감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외교부의 영사 업무에 대한……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정이 되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윤 장관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기억납니까? ‘왜 하필이면 배상금이 10억 엔입니까?’ 하는 질문이 생각나시나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 아주 큰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10억 엔이냐?’ 그랬을 때 윤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다면 1엔만 받지 왜 10억 엔이냐? 10억 엔의 산출 근거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의원들 한 10명 가까이와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한마디로 ‘왜 우리가 10억 엔 줬는데 너희들은 합의 이행 안 하느냐?’ 아베 총리의 얘기와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부산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부산 소녀상의 문제는 한국의 어떤 법령으로도 그것을

막을 법령이 없다. 만약 그것을 행정조치로 제한한다면 그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알아둘 것은 한국의 야당은 일관되게 반대를 했고, 한국의 국민들은 60% 이상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아베 수상은 10억 냥이니까 이행하라 그리고, 또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통화 스와프를 하는데 한국이 이것을 안 갚을 수 있다, 떼어먹을 수 있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한 것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할 얘기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소 다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고 세계 11위의 경제국가다, 10위권의 경제국가다. 그리고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3800억 불이다, 세계 5위다. 그런 한국을 두고 통화 스와프에 떼어먹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10억 엔 썼으니까 이행하라든가 하는 것은 한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만약에 최소한 백보 양보해서라도 이 돈 문제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에는 소녀상이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예산으로 갚아 주든지, 아니면 단 하루면 민간 모금으로 그 정도의 돈은 다 마련할 수 있다. 당신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당신 수상이나 아소 다로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0만 재일거류민단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하는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최근의 이 위안부 협정 얘기를 보면서 제가 그날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쪽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처음 듣는다.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사후에 들려 왔어요.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자꾸 진행이 되는가? 요구하고 비난할 것은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자꾸 요구하고 비난하는가? 그것은 우리 정부와 지도층들의 대응에 잘못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일대사관의 대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장관께서 부인하시니까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재일거류민단에게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사가 아니지요. 그럴

시간 있으면 미국의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우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설득하는 것이 임무지 어떻게 재일거류민단을 부추겨서 한국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말을 하게 하는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박 위원님께서 아주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사례가 단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 내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귀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러한 3개 항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아베 총리가 사죄·반성을 하고, 정부출연 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서 이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 구제 문제도 더 진전이 되어 나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본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고, 특히 한일 관계가 신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재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를 다룰 때도 65년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이런 일본 측이 발표한 문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민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록 피해자 분들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 정

부가 반복할 수 없게끔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한일 외교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 미국도 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학자들도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고요.

다만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비판을 받는 것은 제가 현실로 인정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 위원 시간은 끝났는데요,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가역적·최종적이라는 것에, 역사의 문제는 그렇게 정리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로서의 분노와 당당함이 있어야지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피해자이면서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그런 저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도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강창일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한·아프리카센터법안 등 16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 개선과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신 김도읍 위원님 대신에 유기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 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외교 현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새로운 정책 방향과 다양한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업무 과정에 위원님들의 제언과 말씀 취지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외교 현안의 해결 등과 관련하여 정부 측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치열한 자세로 고민해 주시고 보다 창의적인 외교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신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창일	김경협	문희상	박병석
설훈	심재권	원혜영	유기준
윤상현	윤영석	이석현	이인영
이주영	이태규	정양석	최경환(새)
추미애	홍문종		

○청가 위원(1인)

박주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관	윤병세	병	세
제1차관	관	임성남	성	남
제2차관	관	안총기	안	총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교섭장	김홍균	김	홍



차 관 보 이 정 규  
 대 변 인 조 준 혁  
 공공외교대사 조 현 동  
 기획조정실장 백 지 아  
 의 전 장 최 중 현  
 다자외교조정관 최 중 문  
 기 후 변화 대사 김 찬 우  
 재외동포영사대사 한 동 만  
 국제안보대사 신 맹 호  
 부 대 변 인 선 남 국  
 감 사 관 박 완 기  
 조 정 기 획 관 이 현 영  
 외교정보관리관 김 동 래  
 인사 기획 관 조 구 윤  
 정 책 기 획 관 마 상 권  
 의 전 기 획 관 함 상 욱  
 원자력·비확산 외 교 기 획 관 정 병 원  
 동북아시아국장 유 정 현  
 북 미 국 장 여 승 배  
 중 남 미 국 장 임 기 모  
 유 럽 국 장 임 수 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박 용 민  
 국제기구국장 이 장 근  
 개발협력국장 정 진 규  
 국제법률국장 박 철 주  
 문화외교국장 이 은 용  
 재외동포영사국장 김 완 중  
 국제경제국장 김 영 준  
 양자경제외교국장 천 준 호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이 형 종  
 북핵외교기획단장 이 상 화  
 평화외교기획단장 김 용 현  
 국 립 외 교 원 장 윤 덕 민  
 주오스트리아공화국 이 용 수  
 대한민국차석대사  
 한국국제협력단 이 사 장  
 이 사 장 김 인 식  
 전략기획이사 김 인 인  
 지역사업이사 최 성 호  
 사업개발이사 정 우 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사 장  
 이 사 장 이 시 형  
 기획협력이사 김 광 근  
 교류협력이사 윤 금 진

재외동포재단 이 사 장 주 철 기  
 기 획 이 사 최 동 준  
 사 업 이 사 김 영 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2017. 1. 20. 이원욱·김영진·황희·최명길·서영교·전재수·제윤경·이종걸·김병관·박정·권철승·김병욱·박남춘·박재호·안규백·설훈·권미혁·김종민·소병훈·김영호·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 발의)**

(2017. 1. 23. 박광은·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홍익표·박정·서영교·김정우·이재정·박홍근·인재근·유은혜·안규백·권철승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홍익표·박정·서영교·이재정·박홍근·인재근·유은혜·안규백·권철승·김현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3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김경협·박재호·박정·추미애·박주민·전혜숙·박남춘·설훈·김병욱·소병훈·심재권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전해철·홍익표·황희·박정·소병훈·박찬대·오제세·윤관석·박홍근·민홍철·정성호·김정우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2017. 1. 11. 정동영·김동철·인재근·이찬열·설훈·서영교·김상희·정재호·박재호·우원식·김종훈·강창일·김종대·박주민·이철희·노용래·김철민·김두관·최운열·이정미·강병원·정춘숙·제윤경·김병욱·고용진·이종걸·도종환 의원 발의)  
1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1. 25. 김성찬·이명수·성일종·이완영·김종희·윤한홍·박덕흠·이현재·홍문표·김관영 의원 발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

(2017. 2. 1. 박주민·금태섭·권미혁·남인순·문미옥·박경미·신용현·이정미·김삼화·정춘숙·안규백·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2017. 2. 6. 김경협·박재호·박정·추미애·박주민·전혜숙·박남춘·설훈·김병욱·소병훈·심재권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